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
더불어민주당

경제 이슈 분석

The Institute for Democracy and Policies
민주정책연구원

경제이슈분석 16호 | 2016년 6월 28일 |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 / 민주정책연구원 국민경제연구센터

# 거시경제 지표들을 통해 본 한국경제의 과제

이현진 연구위원

< 금번 경제이슈분석은 그림을 중심으로 나열되는 내용의 특성상, 가독성을 높이고 편집의 용이함을 위해, 보고·발표용 양식을 취해 작성되었습니다 >

# Ⅰ 경제성장: 성장 둔화와 수출 정체

- 경제성장률 수정 전망치
- GDP대비 수출, 수입
- 수출, 수입 증가율
- GDP대비 상품, 서비스 수출입
- 수출·수입액과 환율 변동
- BREXIT와 한국경제

# 경제성장률 수정 전망치 (한국은행)

(전년동기대비, %)

| | 1월 전망치 | | | | 4월 전망치 | |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2016년 | | | 2017년 | 2016년 | | | 2017년 |
| | 상반기 | 하반기 | 연간 | 연간 | 상반기 | 하반기 | 연간 | 연간 |
| **경제성장률** | 3.1 | 2.9 | **3.0** | 3.2 | 2.9 (-0.2) | 2.6 (-0.3) | **2.8** (-0.2) | 3.0 (-0.2) |
| 민간소비 | 2.8 | 2.0 | **2.4** | 2.3 | 2.6 (-0.2) | 2.0 | **2.3** (-0.1) | 2.2 (-0.1) |
| 설비투자 | 3.0 | 4.7 | **3.8** | 4.2 | -1.1 (-4.1) | 2.8 (-1.9) | **0.9** (-2.9) | 4.2 |
| 건설투자 | 4.8 | 2.4 | **3.5** | 2.8 | 6.7 (1.9) | 2.4 | **4.4** (0.9) | 2.2 (-0.6) |
| 상품수출 | 1.9 | 2.5 | **2.2** | 2.8 | -0.3 (-2.2) | 1.8 (-0.7) | **0.8** (-1.4) | 2.7 (-0.1) |
| 상품수입 | 3.4 | 0.6 | **2.0** | 2.6 | 0.6 (-2.8) | 0.2 (-0.4) | **0.4** (-1.6) | 2.6 |
| **소비자물가** | 1.2 | 1.5 | **1.4** | 2.0 | 1.0 (-0.2) | 1.4 (-0.1) | **1.2** (-0.2) | 2.0 |
| 농산물·석유류 제외 | 1.9 | 1.8 | **1.8** | 1.9 | 1.8 (-0.1) | 1.8 | **1.8** | 1.9 |
| 식료품·에너지 제외 | 2.0 | 1.8 | **1.9** | 1.9 | 1.9 (-0.1) | 1.8 | **1.9** | 1.8 (-0.1) |

- 전망치 발표 시마다 계속해서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음
- 1분기 실적 발표치는 실질GDP는 전년동기대비 2.8%(전분기대비 0.5%) 성장
  민간소비 2.2%, 설비투자 –4.5%, 건설투자 9.6%, 수출 0.7%, 수입 1.9% 성장
- 연간 전망치에 비해 설비투자는 부진하고 건설투자는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

# 경제성장률 수정 전망치(여타 기관)

**KDI** (5월): 한국은행 전망치보다 더 낮은 수준

경제성장률 2.6%, 민간소비 2.2%, 설비투자 –3.0%, 건설투자 5.3%
상품수출 0.2%, 상품수입 0.8%

**예산정책처** (5월): KDI와 비슷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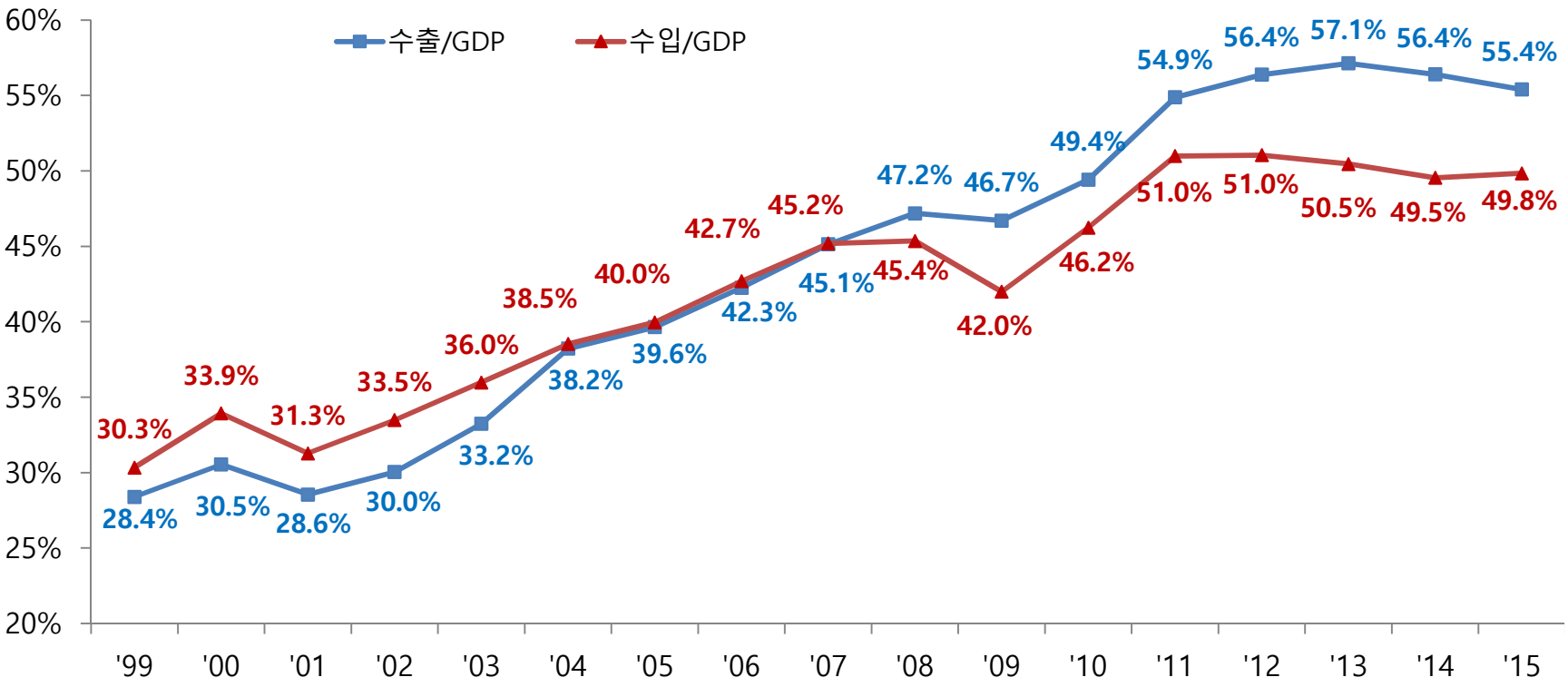
경제성장률 2.5%, 민간소비 2.1%, 설비투자 0.7%, 건설투자 3.7%

**OECD** (6월): 2.66%　　**IMF** (4월): 2.7%

**LG경제연구원** (4월): 2.4%　　**현대경제연구원** (4월): 2.5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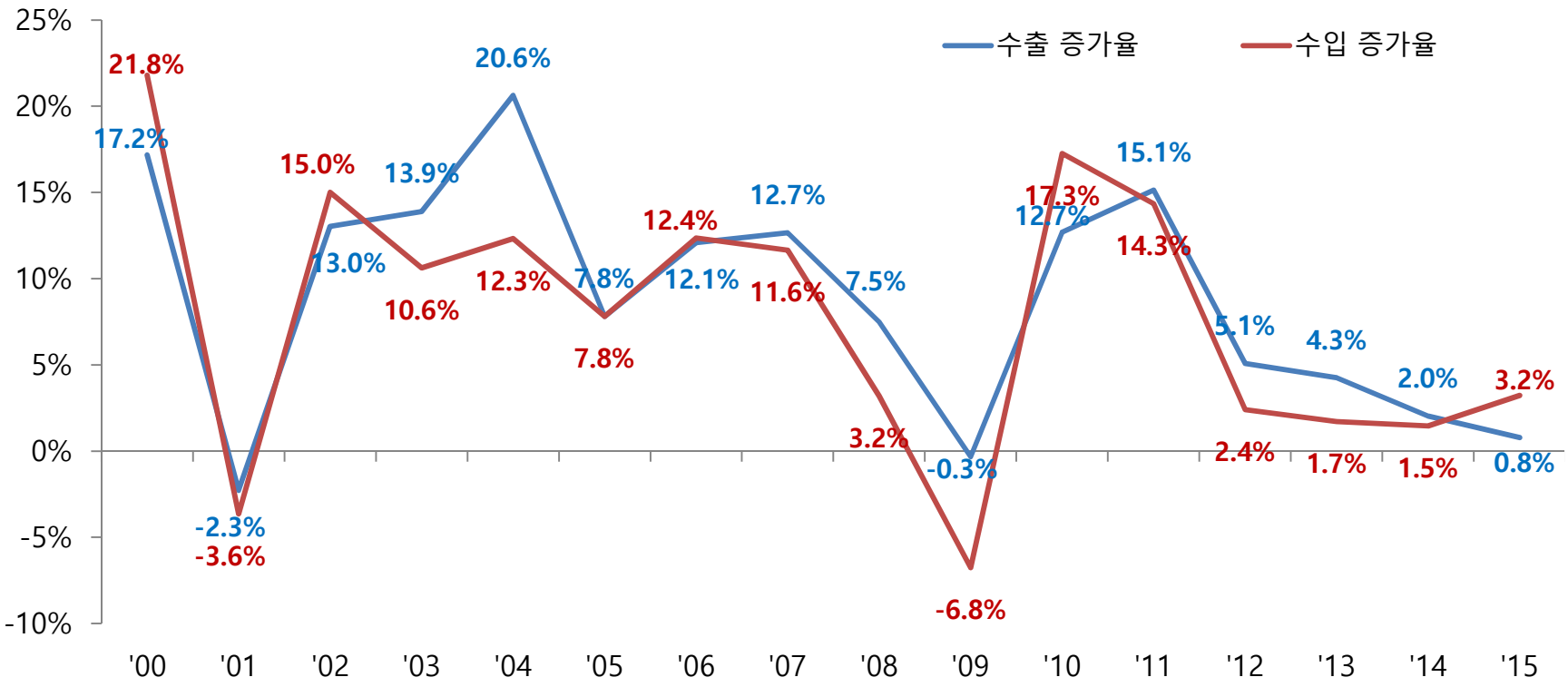
- 이들 기관들 모두 수출의 둔화내지 악화를 예상
- 내수 또한 민간소비와 설비투자에 대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함
- 내수는 주택건설을 중심으로 한 건설투자만 상향 조정함으로써 현재 한국경제는 경제성장을 주택건설에 크게 의존하는 양상을 보임

# GDP 대비 수출, 수입 (실질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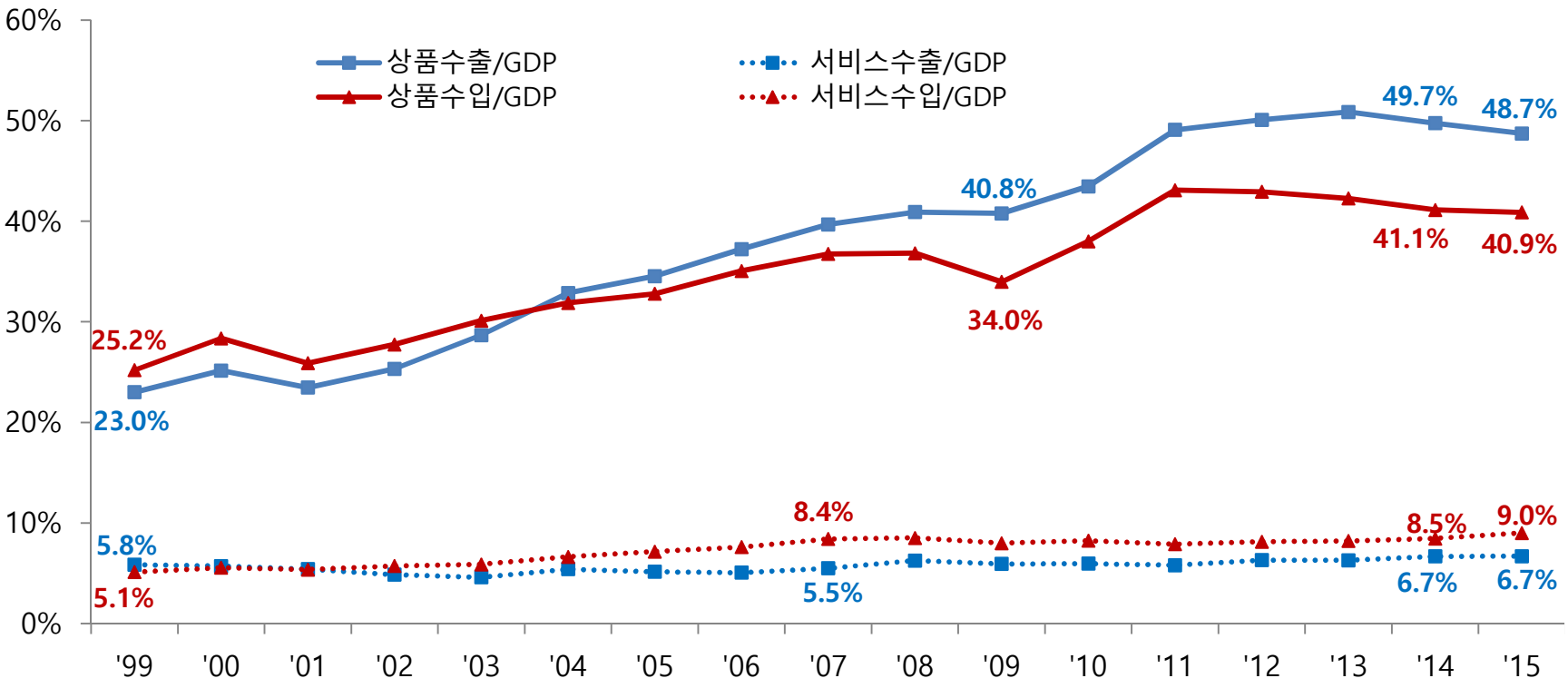

- 한국경제는 급속하면서도 지속적인 대외의존도 심화 양상을 보여 경제성장이 주로 수출 성장을 통해 이루어져 옴
- 그러나 최근 그 성장세가 둔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어 수출 중심의 경제성장이 한계에 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생김

# 수출, 수입 증가율 (실질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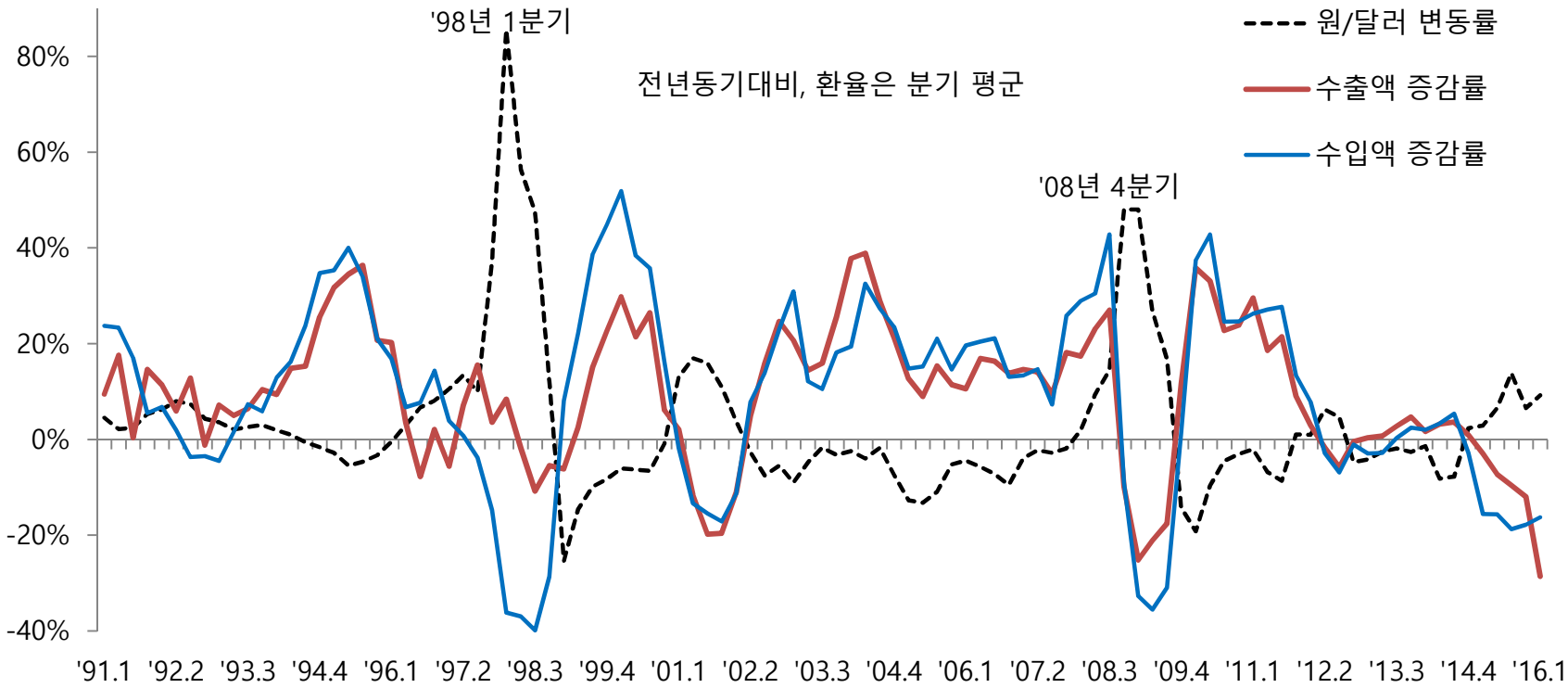

- 수출 증가세가 최근 급격히 둔화되는 양상을 보임
- 2015년은 원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원유 수입 증가, 자동차 수입 증가, 운송서비스 및 거주자 국외소비 증가 등으로 수입 증가율이 수출 증가율을 능가함

# GDP 대비 상품, 서비스 수출입 (실질)




- 상품수지는 2004년 이후 흑자를 유지하고 있으나 반대로 서비스수지는 2002년 이후 지속적으로 적자가 유지되고 있음
- 2015년도는 상품수지 흑자 증가세가 감소한 반면 서비스수지 적자는 증가

# 수출·수입액과 환율 변동




- 한국경제의 총수출액 증감이 환율 변동과는 오히려 강한 음의 관계를 나타냄. 수입액은 수출에 의해 결정되는 양상으로 인해 '환율 탄력도'가 비탄력적임
- 이는 1) 환율 효과의 시차 존재, 2) 경제위기로 인한 원화가치 급등락(안전자산 선호), 3) 수출단가 하락에 따른 달러환산 수출총액의 하락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음
- 결론적으로, 수출의 증감은 환율보다는 국내재 수요국들의 경기상황에 주로 좌우됨

# BREXIT와 한국경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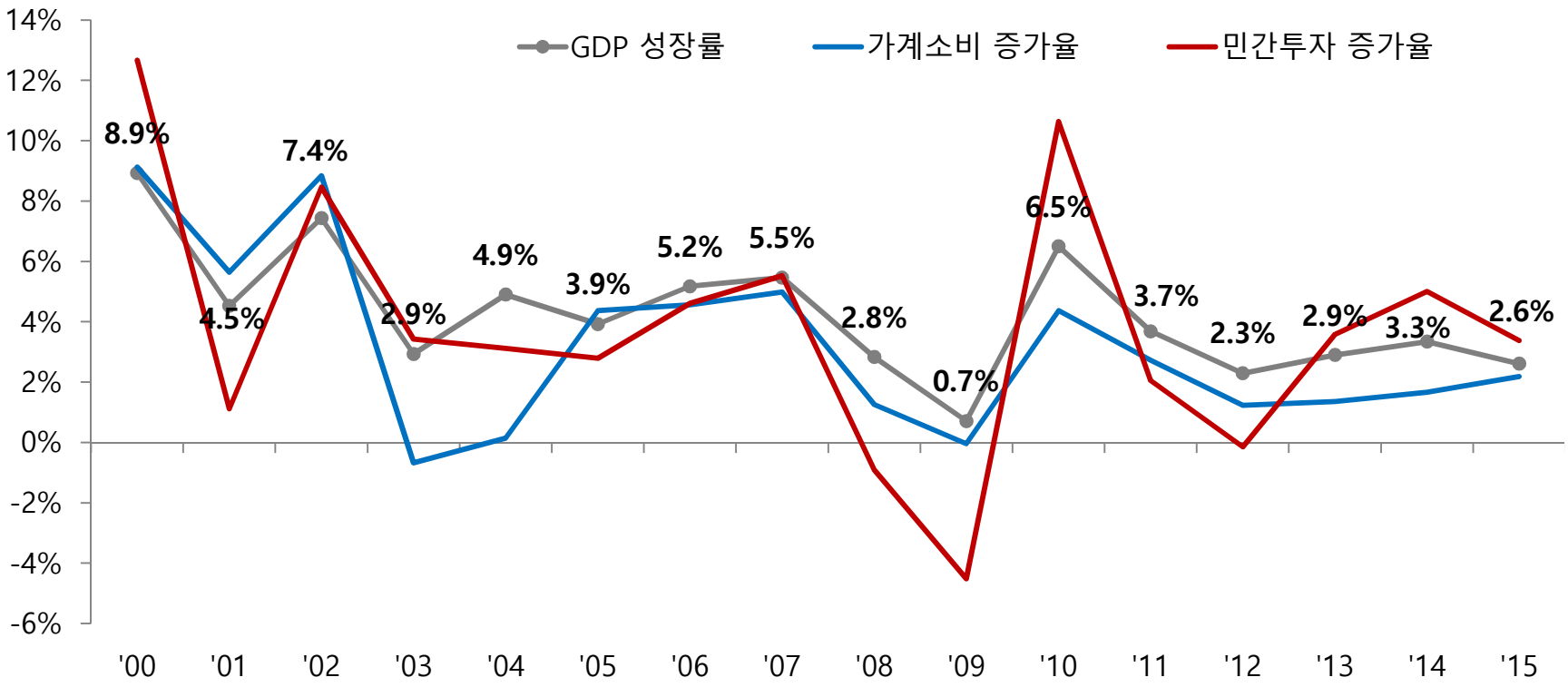
| | '11년 | '12년 | '13년 | '14년 | '15년 1~5월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영국으로 수출 (백만$) | 4,969 | 4,897 | 4,727 | 5,783 | 2,643 |
| 영국에서 수입 (백만$) | 3,818 | 6,360 | 6,194 | 7,447 | 2,388 |
| 상 품 수 지 (백만$) | 1,151 | -1,463 | -1,467 | -1,664 | 255 |
| 영국으로 투자금액 (백만$) | 1,322 | 259 | 234 | | |

- 한국은 對 영국 무역 비중이 낮고 한국과 영국의 상호 직접투자 규모 또한 미미한 수준임 (참고: 국내기업의 영국현지법인은 삼성전자의 판매법인 정도가 크고 다른 대부분의 기업들은 대부분 종업원 10명 이내의 판매법인, 지점 또는 연락소임)
- 다만, 글로벌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, 영국과 유럽 경제의 불확실성을 증대시켜 경제성장률 둔화를 가중시키고 글로벌 경제 회복에 악영향을 줄 것임
- 또한, 국내외 금융시장 또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로 환율·주가 등의 변동성을 크게 증가시켜 단기자금의 유출입이 커질 가능성이 높음. 따라서,
- 1) 엔화 및 달러화 강세에 따른 수출가격 경쟁력면의 호재와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 부족이라는 악재가 동시에 작용하는 측면이 있으나, 수요 부족으로 인한 경기회복 둔화가 더 우려됨 (영국에 대한 EU의 각종 조약의 폐기는 영국·EU 간 합의문 채택 후 발효)
- 2) 영국과 EU의 '탈퇴 합의문' 작성이 늦어질 경우, 탈퇴까지 2년 이상이 소요되는 바, 금융시장을 포함한 경제주체들이 과도한 불안감을 느끼는 것은 불필요해 보임
- 3) 정부와 당국 또한 위기의식 조장보다는 경제 건전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정책 시행과 함께 경제정책 결정 및 수행에 있어 불확실성을 최소화해야 할 것임

# II 경제성장: 성장 둔화와 내수 부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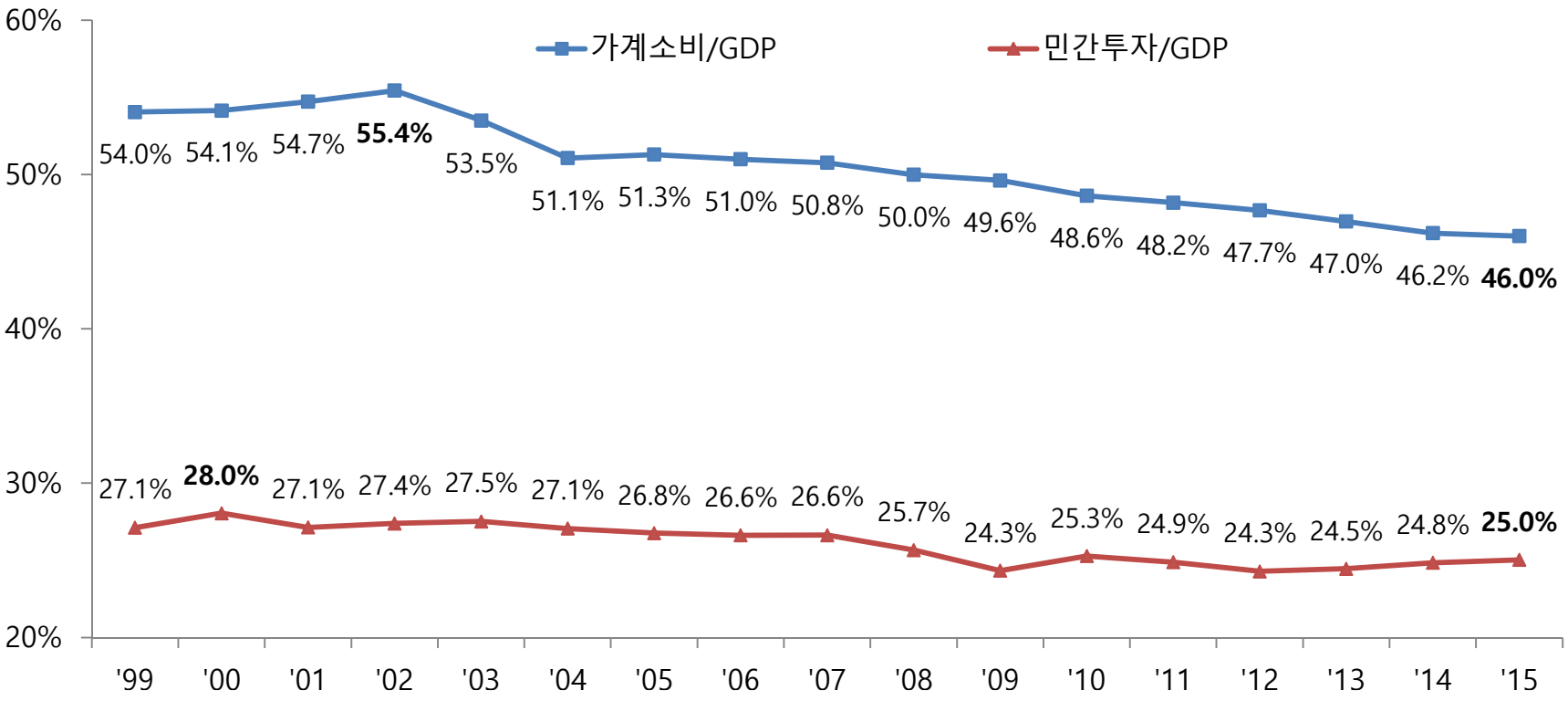
- GDP, 가계소비, 민간투자 증가율
- GDP대비 가계소비, 민간투자
- 내구재·준내구재 소비, 가계소비 증가율
- 내국인 국외소비
- 총투자 증가율과 국내투자 증가율
- 총투자 중 국외투자 비중

# GDP, 가계소비, 민간투자 증가율 (실질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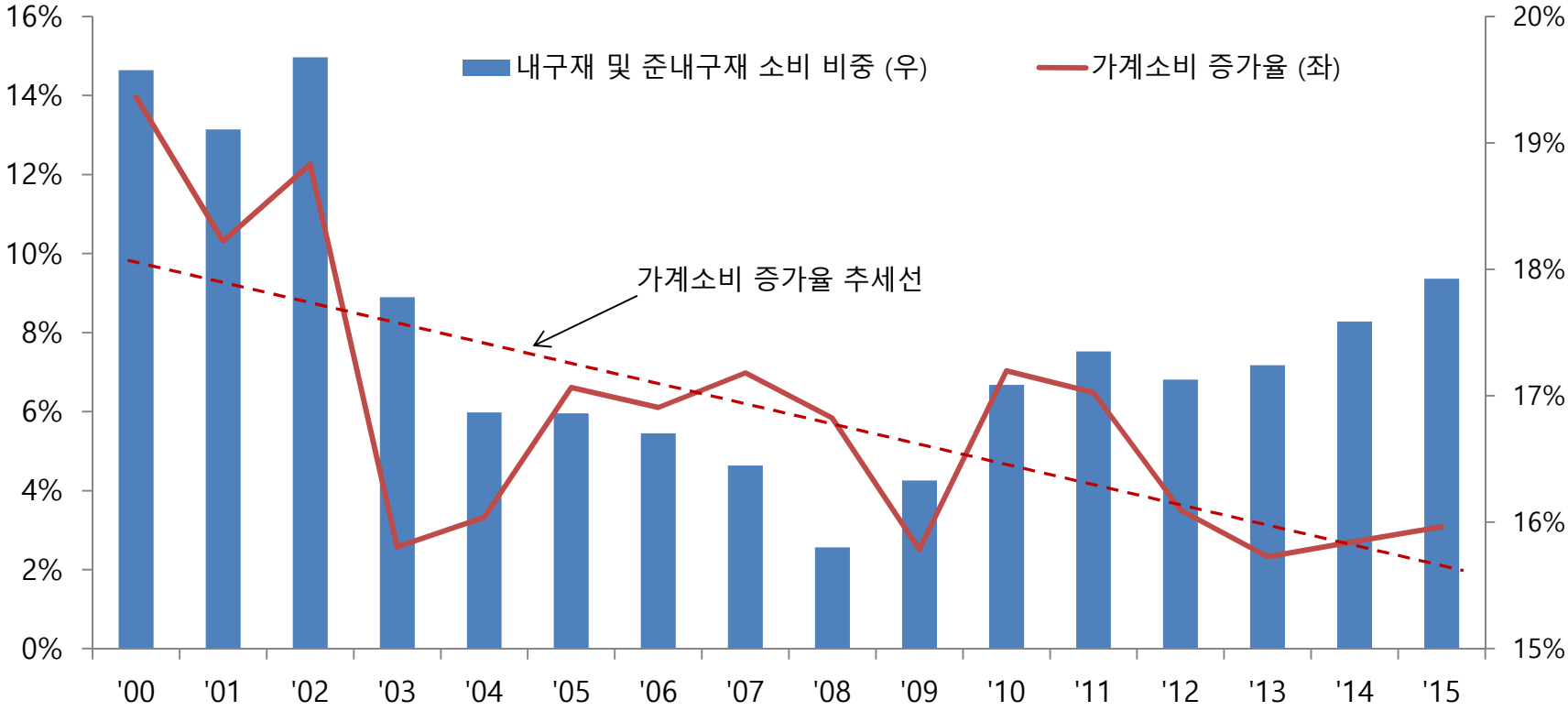

- 한국경제의 가계소비 증가율이 기조적으로 경제성장률을 하회하고 있어 소비 둔화가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

# GDP 대비 가계소비, 민간투자 (실질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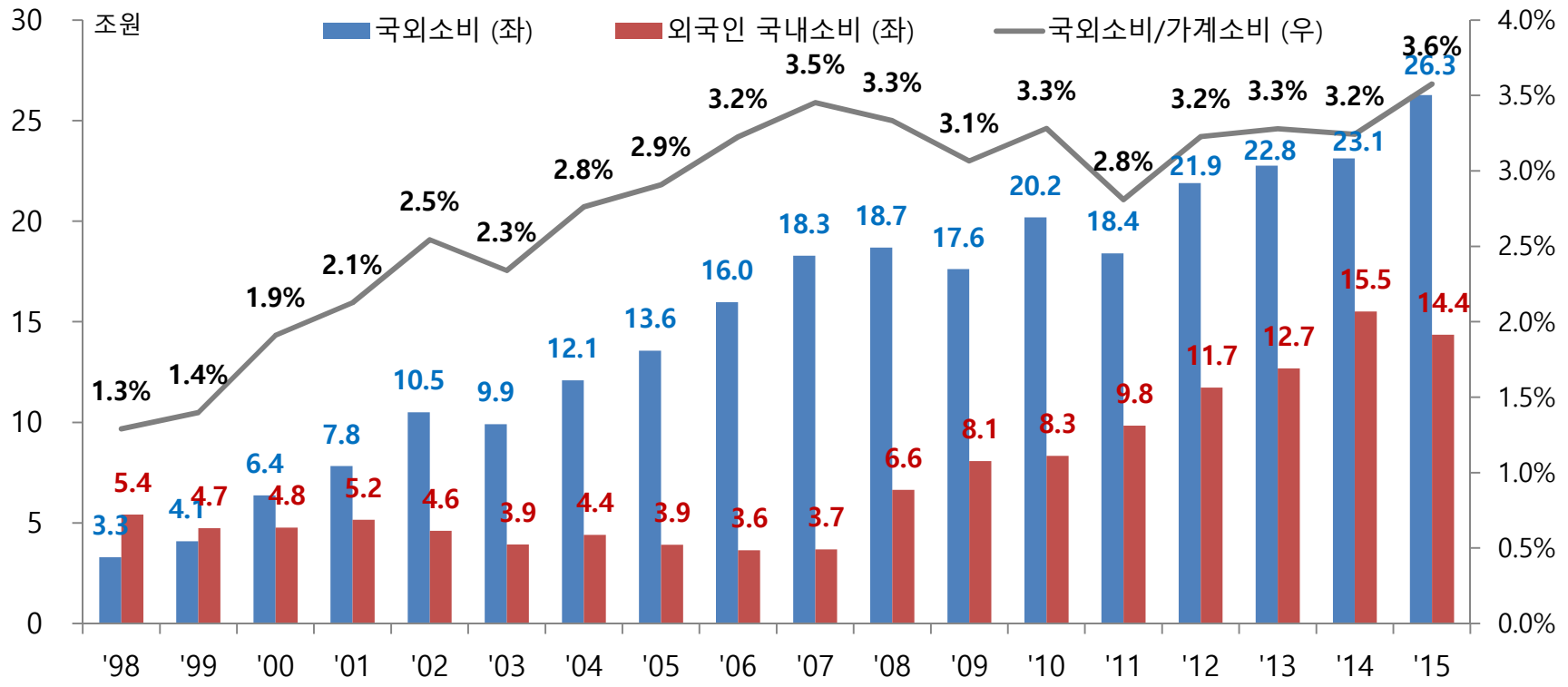

- GDP 대비 가계소비 비중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2015년 현재 2002년 고점 대비 9.4%p나 빠진 상태임
- 경기변동에 영향을 크게 받는 민간투자 비중 또한 완만하지만 하락 양상을 보임
- 이는 내수 부진이 심화되고 있음을 의미함

# 내구재·준내구재소비, 가계소비 증가율(명목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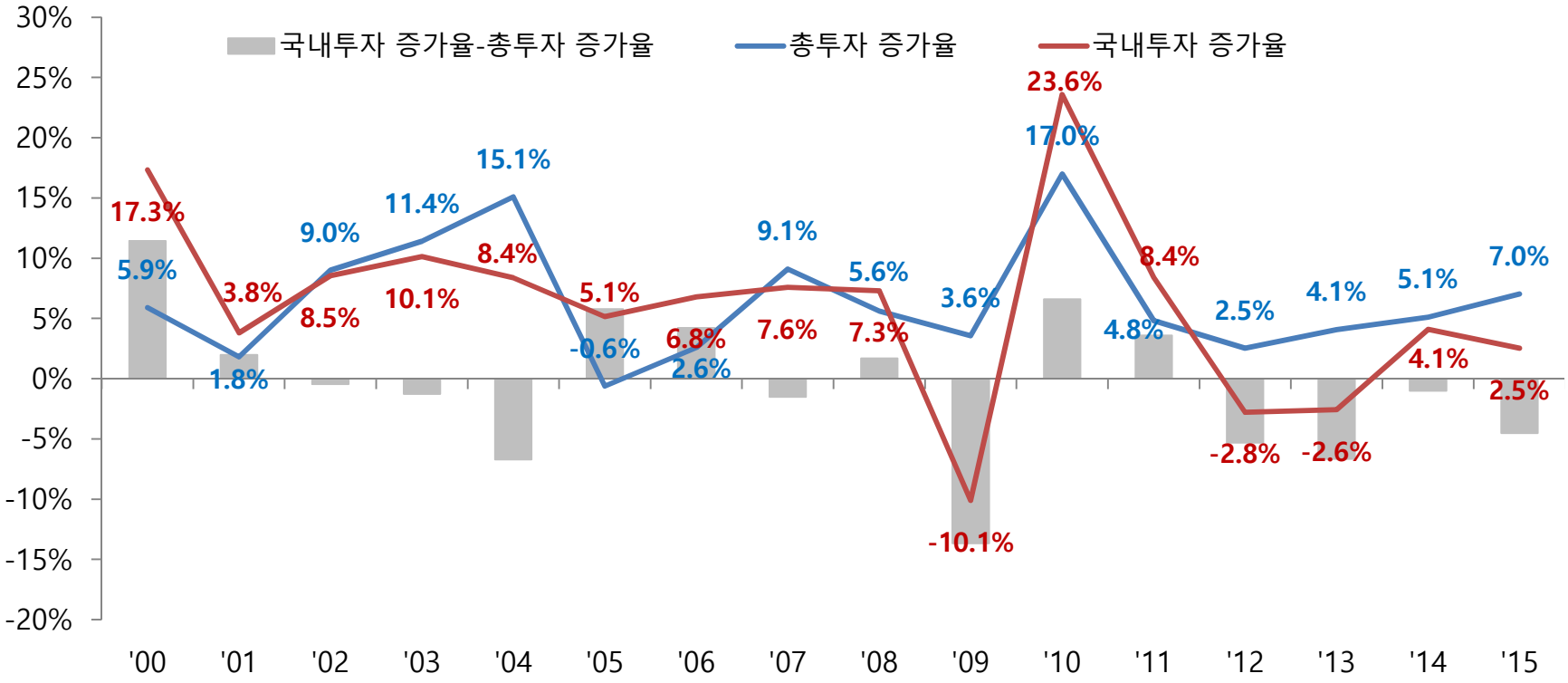

- 가계소비 중 비내구재·서비스부문 비중은 80%대, 내구재(자동차, 가전제품 등)·준내구재(의류 등)는 20% 이내임. 통상 경기침체 국면에서는 내구재·준내구재 소비 비중이 낮아지는 양상을 보임
- 최근 가계소비 둔화 속에 내구재·준내구재 소비가 다소 증가하여 통상적인 경기침체기와 다소 다른 양상을 보임
- 이는 1) 경기침체의 장기화에 따른 가계의 소비지출 移延이 한계에 달했거나 2) 현재와 같은 저성장이 고착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

# 내국인의 국외소비 (명목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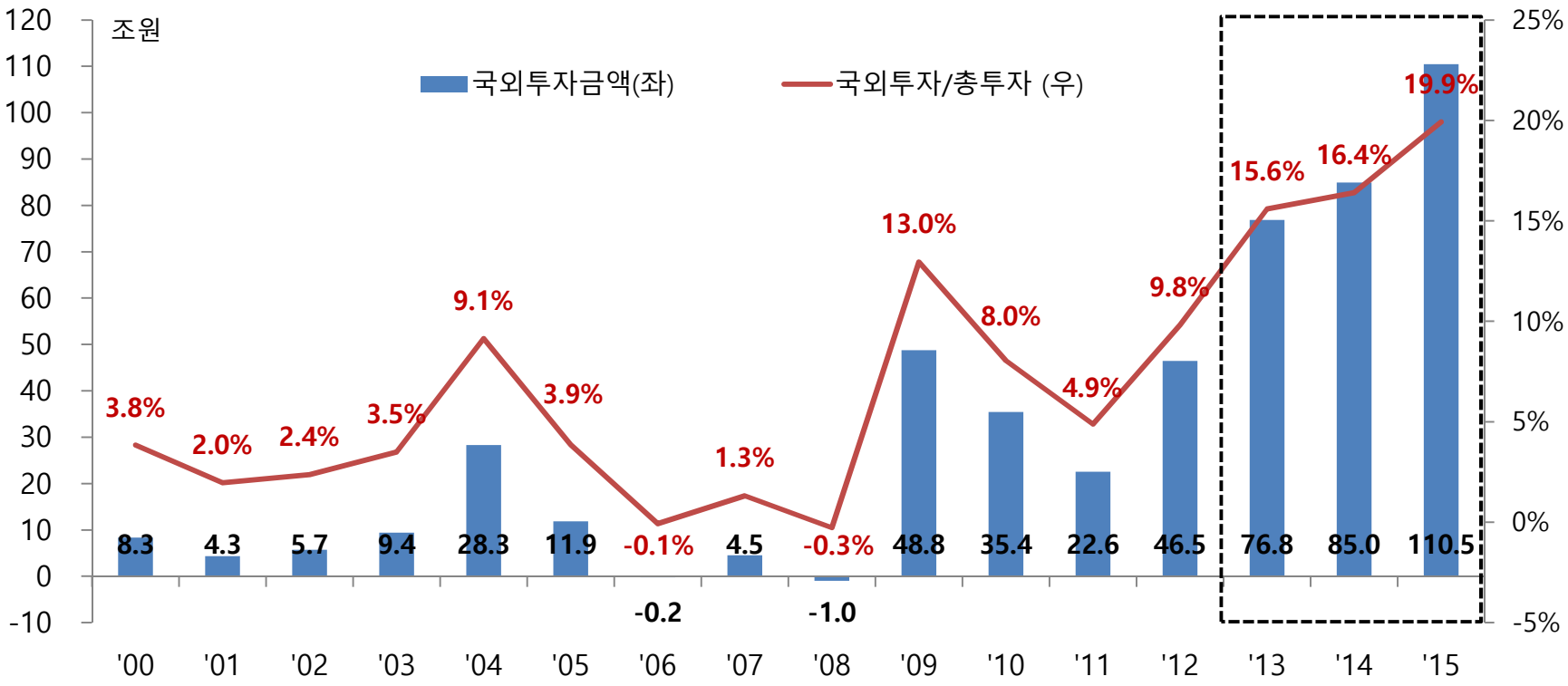

- 내국인의 국외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1998년 대비 외국인의 국내소비는 3배 증가한 반면 내국인의 국외소비는 8배 가량 증가함
- 내수는 침체되는 가운데, 국외소비 증가는 소득 및 소비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양상의 단면으로 볼 수 있어 우려됨

# 총투자 증가율과 국내투자 증가율 (명목)




- 총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세에 있으나 국내에서의 투자 증가율은 총투자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투자 증가의 상당부분이 국외로의 투자 증가로 구성됨

# 총투자 중 국외투자 비중 (명목)




- 총투자에서 국외로의 투자 비중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에는 20%에 달함
- 이는 기업들이 생산기지를 국내보다는 국외에 대해 집중적으로 증가시키고 있어 국내에서의 고용 및 내수 부진의 원인이 되고 있음을 시사함
- 이러한 양상은 박근혜 정부 들어 두드러지게 심화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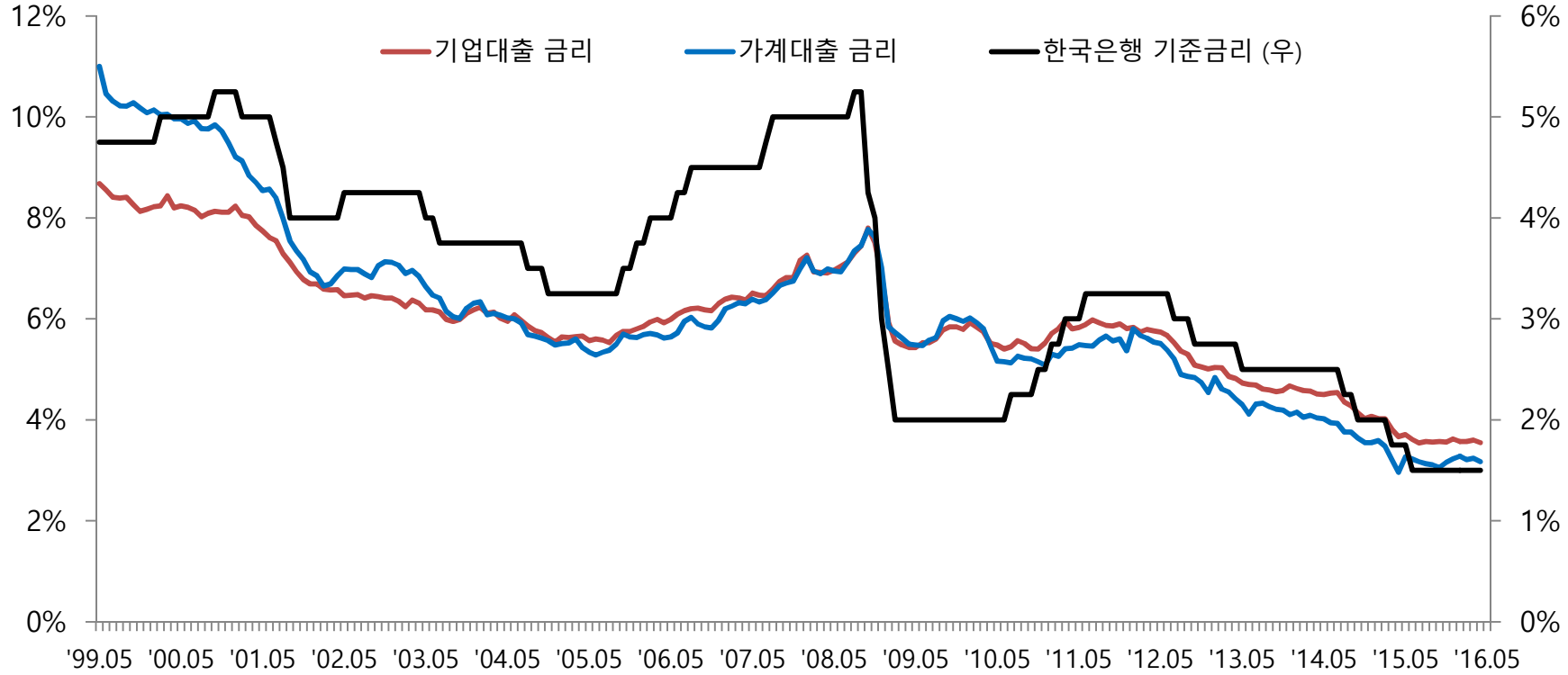
# 요약 (경제성장)

- 한국경제는 기조적이고 빠른 속도로 경제성장률이 하락하고 있음
- 한국은 수출 중심의 경제성장을 견지해 온 경제였으나 이를 통한 큰 폭의 추가적 성장은 한계에 달한 것으로 보여 우려되는 상황임
- 현재 경제성장을 받침하고 있는 것은 민간소비나 설비투자가 아닌 주택건설과 같은 건설투자임
- 경제성장률에 미치지 못하는 가계소득 증가와 함께 직장·노후 등에 대한 불확실성 증가로 인해 가계소비는 눈에 띄는 하향세를 보이고 있음
- 투자 또한 가계소비 둔화에 따라 부진한 양상을 보임과 동시에 국외투자가 급증하는 양상을 보여 향후 고용 및 내수 부진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임

# III 주거부담: 가계부채 폭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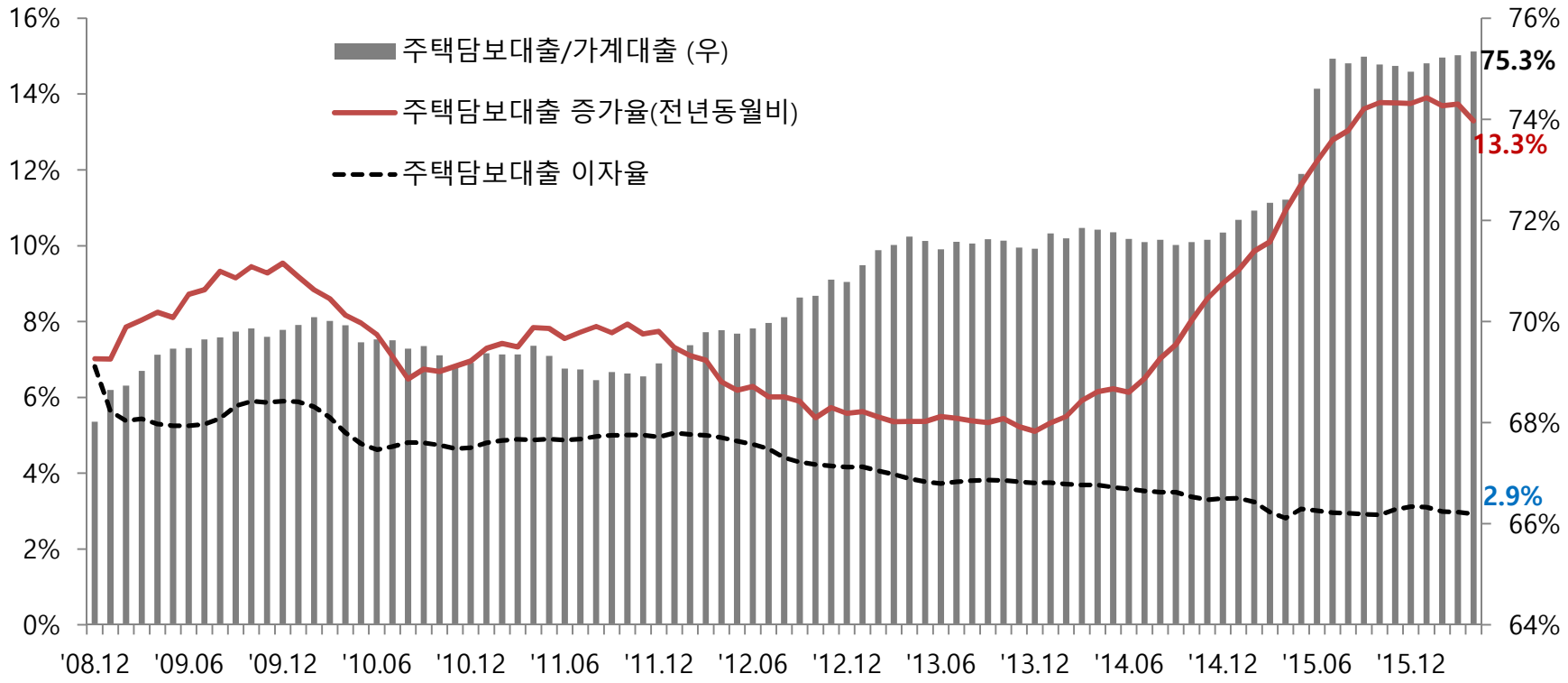
- 가계 및 기업 신규대출금리, 한국은행 기준금리
- 주택담보대출추이
- 주택 매매가격 및 주택담보대출 증가율
- 주택 매매가격 및 전세가격 추이
- PIR(Price to Income Ratio)

# 가계 및 기업 신규대출금리와 한국은행 기준금리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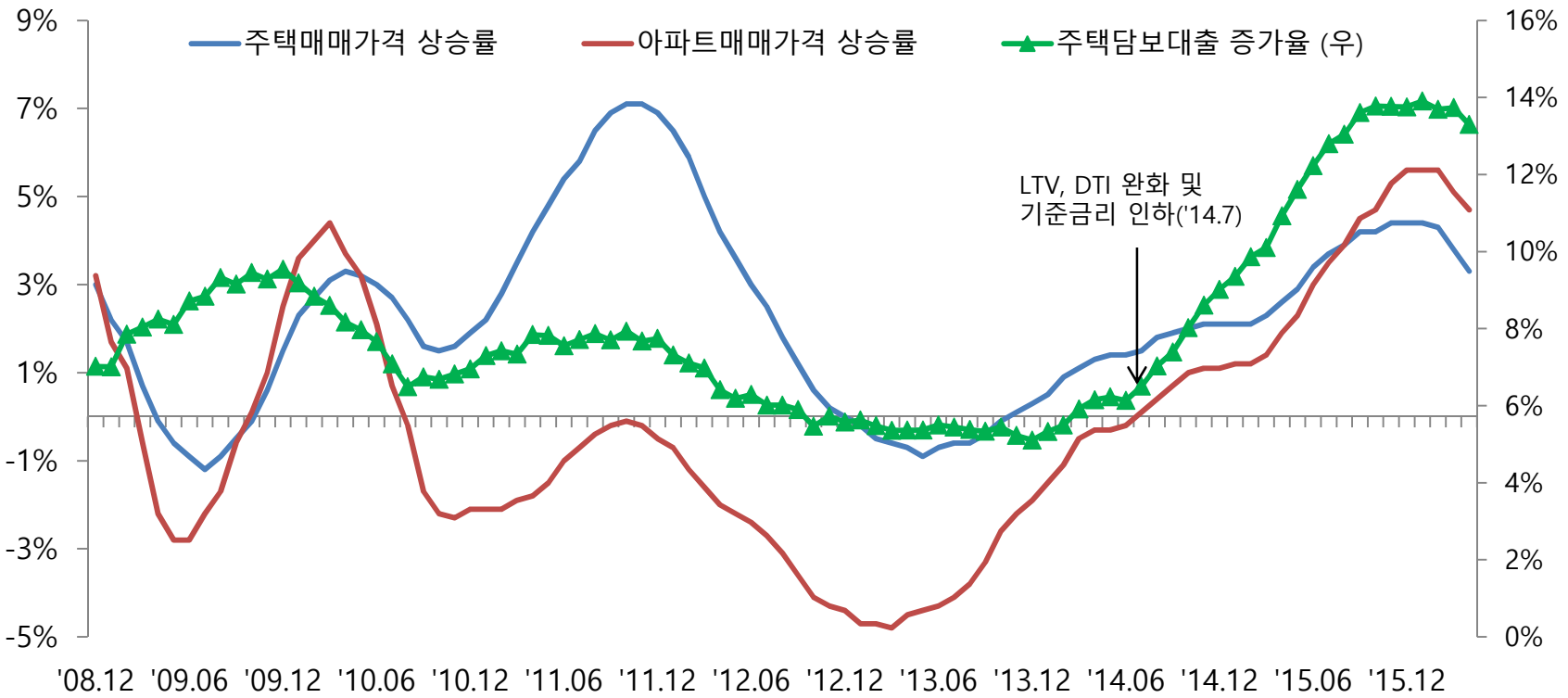

- 한국은행은 6월 기준금리를 1.50%에서 1.25%로 인하함. 이는 기준금리를 통한 통화정책 수행 이후 최저 수준임
- 이는 1)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시기가 하반기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기에 대비하기 위한 측면, 2) 경기진작 압력을 받은 측면, 3)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측면이 있음
- 금리 인하를 통한 소비 및 투자 등 실물경기 진작 효과가 현격히 약화된 상황에서, 최근 다소 증가세가 주춤했던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도 다시 촉발될 우려가 있음

# 주택담보대출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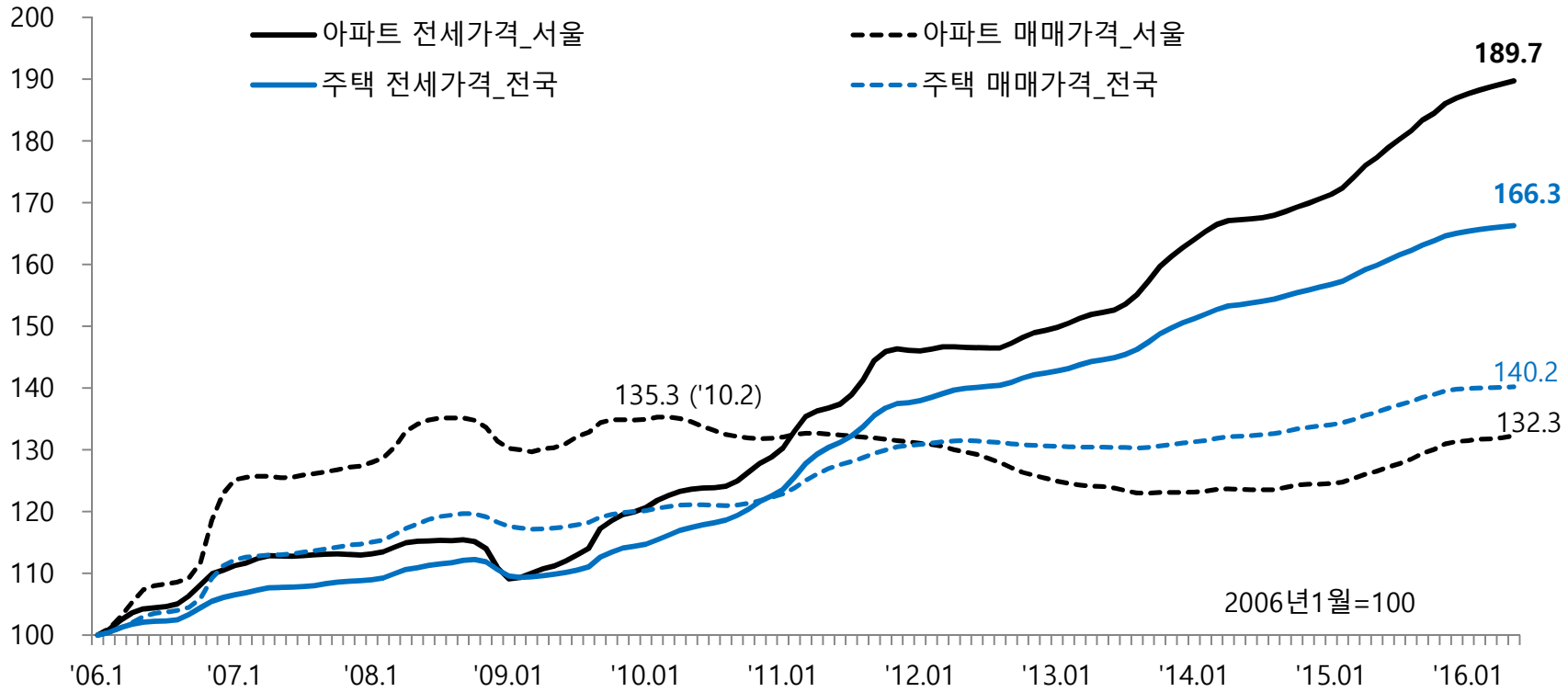

-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대비 주택담보대출 비중은 2016년 4월 75.3%에 달하고 그 증가 속도가 매우 급격함
- 이는 저금리 기조 유지로 인한 가계대출금리 하락이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됨

# 주택매매가격 및 주택담보대출 증가율




- 주택담보대출 증가는 주택(아파트)매매가격 상승률을 선행하여 이끄는 양상을 보임 ('14년부터 아파트 분양이 증가함에 따른 집단대출이 크게 증가하는 양상 보임)
- 대출을 통해 매매에 참여하고 가격 상승을 유발하고 이는 다시 대출금액 증가를 유발하는 순환이 이루어짐
- 향후 주택가격 하락이나 금리 상승기 도래시, 가계부채는 한국경제 위기의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농후함

# 주택 매매가격 및 전세가격 추이




- 매매 및 전세 가격지수를 2006년 1월을 100으로 표준화하여 나타낸 것으로, 10여년 동안 2016년5월까지 아파트 전세가격은 89.7%, 주택 전세가격은 66.3% 상승한 것을 의미함
- 매매가격에 비해 전세가격이 급등한 이유는 1) 주택가격 상승 기대의 둔화와 함께 2) 금리 하락으로 인해 임대인들의 수익률 저하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음

# PIR(주택가격/소득)

| | | 전국 가구 연소득 | | | | | | 서울 가구 연소득 | | |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| **1분위** (=1.0) | **2분위** (2.0) | **3분위** (2.9) | **4분위** (3.8) | **5분위** (6.4) | | **1분위** (=1.0) | **2분위** (2.0) | **3분위** (2.8) | **4분위** (3.8) | **5분위** (6.3) |
| **평균 주택 가격** | **1분위** | 7.0 | 3.4 | 2.4 | 1.8 | 1.1 | **1분위** | 14.2 | 7.0 | 5.0 | 3.7 | 2.2 |
| | (=1.0) | 4.7 | 2.3 | 1.7 | 1.2 | 0.7 | (=1.0) | 9.9 | 4.9 | 3.5 | 2.6 | 1.6 |
| | **2분위** | 11.5 | 5.6 | 4.0 | 3.0 | 1.8 | **2분위** | 21.5 | 10.7 | 7.6 | 5.7 | 3.4 |
| | (1.6) | 8.5 | 4.2 | 3.0 | 2.2 | 1.3 | (1.5) | 16.7 | 8.3 | 5.9 | 4.4 | 2.6 |
| | **3분위** | 15.3 | 7.5 | **5.4** | 4.0 | 2.4 | **3분위** | 27.6 | 13.7 | **9.7** | 7.3 | 4.3 |
| | (2.2) | 11.7 | 5.8 | **4.1** | 3.1 | 1.8 | (1.9) | 21.3 | 10.6 | **7.5** | 5.6 | 3.4 |
| | **4분위** | 20.6 | 10.1 | 7.2 | 5.4 | 3.2 | **4분위** | 36.5 | 18.2 | 12.9 | 9.7 | 5.8 |
| | (2.9) | 15.8 | 7.8 | 5.5 | 4.1 | 2.5 | (2.6) | 26.7 | 13.3 | 9.4 | 7.1 | 4.2 |
| | **5분위** | 33.5 | 16.5 | 11.7 | 8.8 | 5.2 | **5분위** | 63.0 | 31.3 | 22.2 | 16.7 | 9.9 |
| | (4.8) | 24.6 | 12.1 | 8.6 | 6.4 | 3.8 | (4.4) | 40.6 | 20.2 | 14.3 | 10.7 | 6.4 |

* 2016년 3월의 PIR임. 표에서 각 셀의 윗수는 '매매가격/연소득', 아랫수는 '전세가격/연소득'을 의미함. 분위별 밑의 괄호 안의 수는 1분위 대비 몇 배인지를 의미함

- PIR(Price to Income Ratio)은 年소득을 한 푼 쓰지 않고 모아 주택을 매입 또는 전세를 얻는 데 소요되는 연수로 이해할 수 있음
- 서울의 저소득 가구의 경우, 가장 싼 주택이라도 가구소득을 모두 저축해도 주택 매입에는 14년, 전세를 얻는 것도 10년이 소요됨
-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정책의 우선이 되어야 할 이유 중 하나로 판단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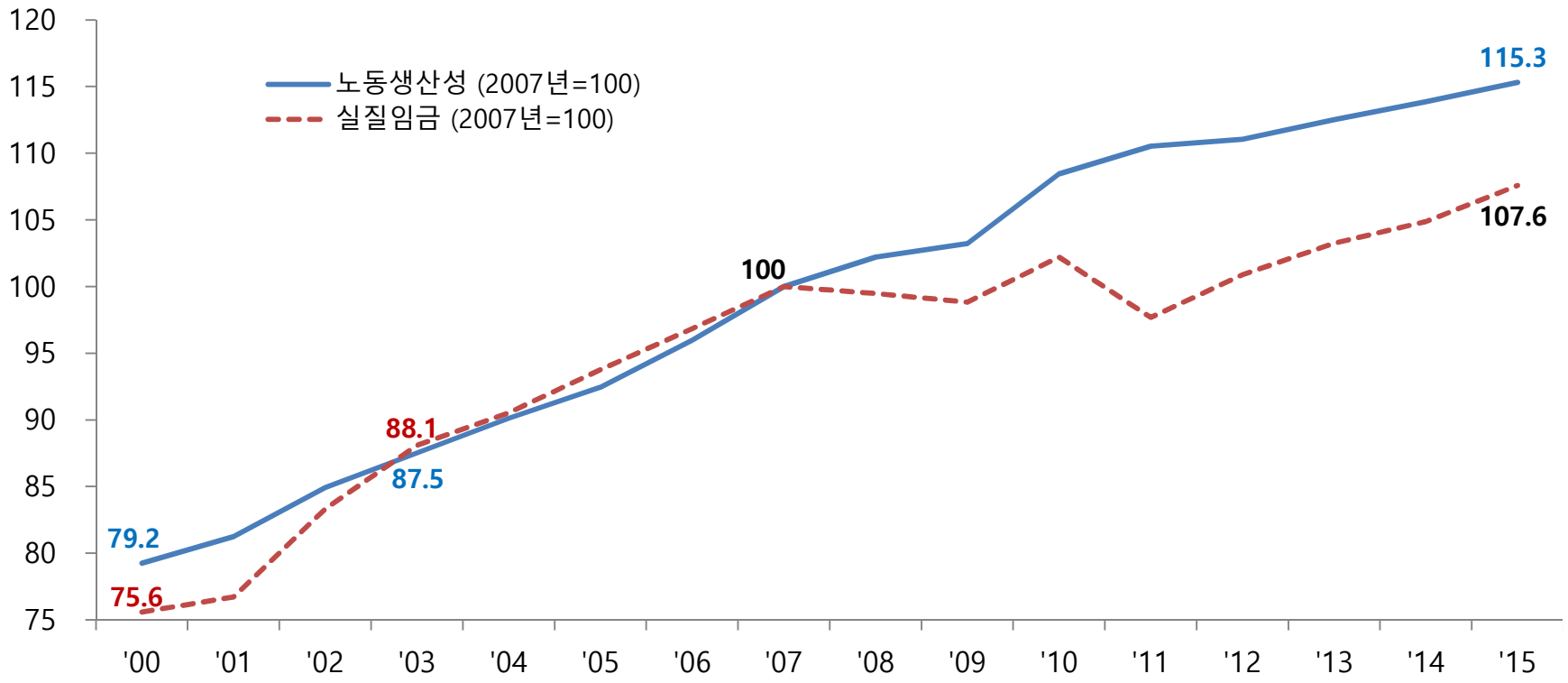
# 요약 (주거부담)

- 한국은행은 경기진작책으로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여 2012년 7월 이후 8차례에 걸쳐 총 2%p (3.25%→1.25%) 인하함
- 그러나 한국은행도 스스로 밝힌 바와 같이, 금리 인하에 따른 실물경기 진작 효과는 미진한 상태임
- 다만, 기준금리 인하로 대출금리도 인하되어 대출은 급증하는 양상임
- ’14년7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정부의 LTV, DTI 완화책 발표 이후 주택담보대출이 급격히 증가함
- 향후, 주택담보대출 급증은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기나 금리 상승기에 한국경제의 급랭 원인이 될 소지가 있음
- 주택 매매가격보다 전세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저소득 가구에 대한 주거대책 마련이 시급함

# IV 노동시장: 불평등과 고령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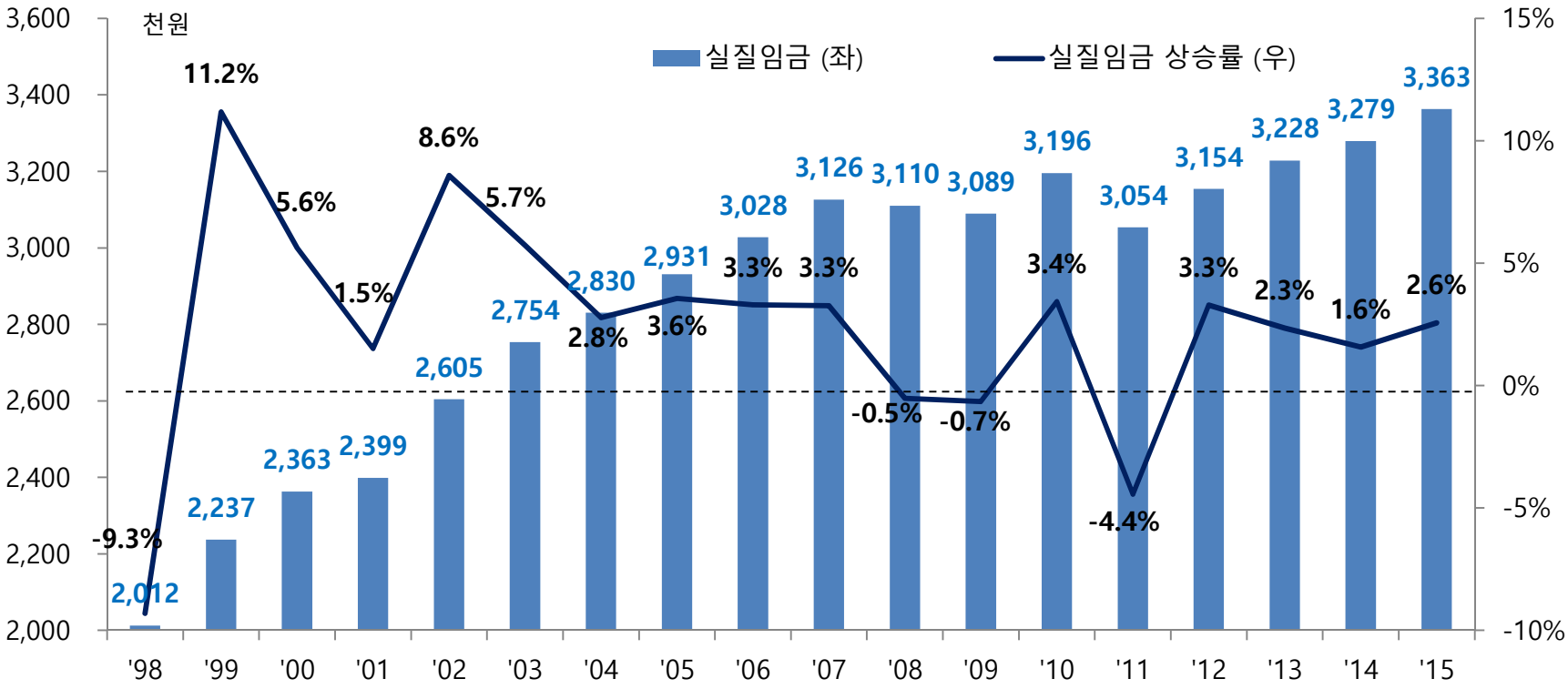
- 노동생산성과 실질임금
- 상용(정규직) 근로자 실질임금
- 정규직·비정규직 시간당 임금 격차
- 연령대별 시간당 임금
- 성별 시간당 임금
- 연령대별 경제활동인구 비중 대비 실업자 비중
- 전체 취업자 대비 연령대별 취업자
- 합계출산율

# 노동생산성과 실질임금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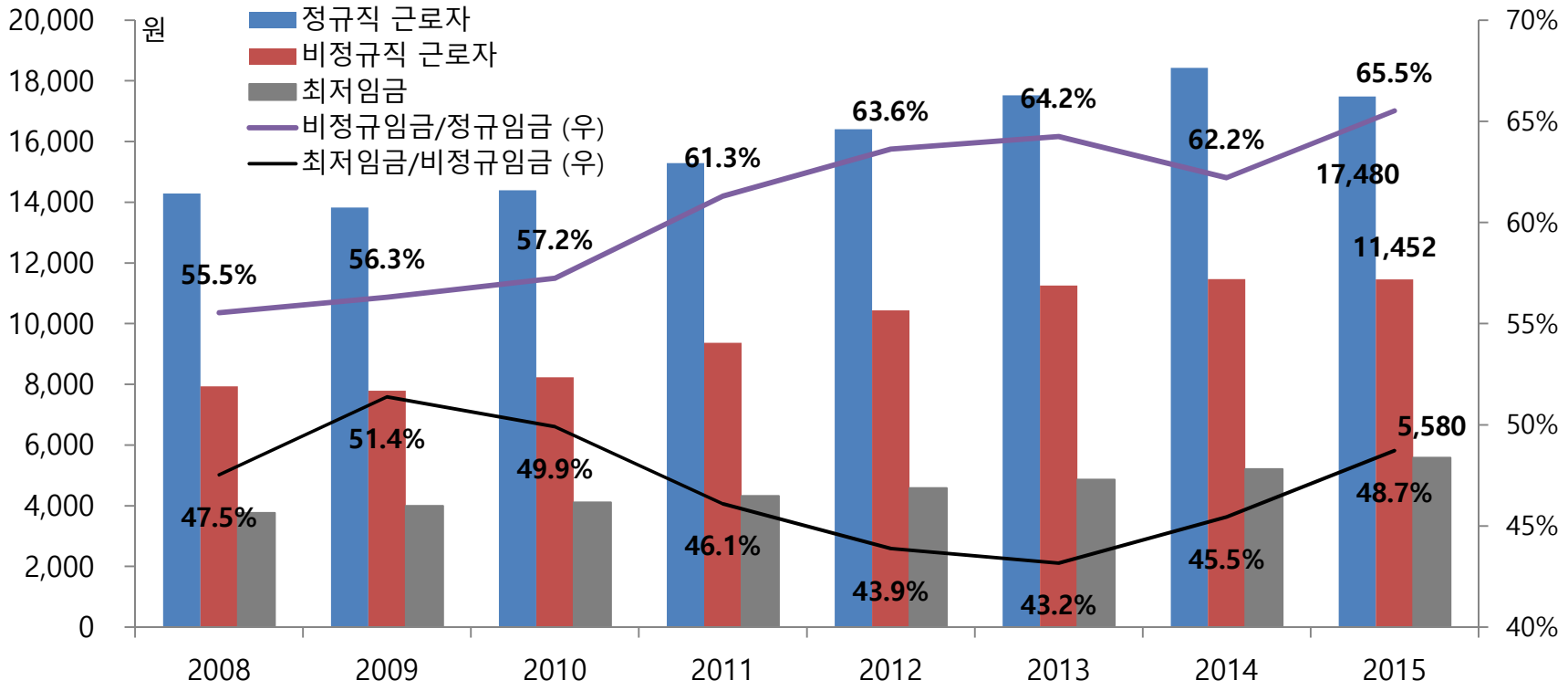

- 노동생산성과 실질임금 수준을 2007년을 100으로 표준화하여 보면, 2003년까지 개선된 실질임금 수준이 2008년부터는 다시 노동생산성을 하회하는 양상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음

# 상용근로자 실질임금




- 상용근로자(전산업 상용10인 이상 고용 사업체 정규직 근로자)의 실질임금 상승률은 1998년부터 2007년까지 10년간은 연평균 3.5% 상승한 반면, 2008년부터 2015년까지 8년간은 연평균 0.9% 상승에 그침
- 임금상승 둔화로 인한 가계의 소득 증가 둔화로 내수 부진은 피하기 어려워 보임

# 정규직·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 격차 ('15)




- 고용노동부가 동일 사업체내 성, 연령, 학력, 경력, 근속연수 등이 같다고 가정하여 발표한 정규직과 비정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임
- 비정규직 근로자 임금은 정규직의 65% 정도에 그침
- 최저임금 수준은 비정규직 시간당 임금의 50%에도 미치지 못함
- 이는 근로자의 고용형태별로 임금 격차가 극심함을 보여줌

# 연령대별 시간당 임금 ('15)

| | 정규직 | | 비정규직 | | 전체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임금(원) | 상대 임금 | 임금(원) | 상대 임금 | 임금(원) | 상대 임금 |
| **평 균** | **17,480** | **100.0%** | 11,452 | 65.5% | 15,978 | 91.4% |
| **19세 이하** | 9,172 | 52.5% | 6,851 | 39.2% | 7,336 | 42.0% |
| **20~29세** | 12,529 | 71.7% | 9,010 | 51.5% | 11,425 | 65.4% |
| **30~39세** | 17,457 | 99.9% | 13,521 | 77.4% | 16,892 | 96.6% |
| **40~49세** | 20,059 | 114.8% | 13,519 | 77.3% | 18,860 | 107.9% |
| **50~59세** | 18,910 | 108.2% | 12,464 | 71.3% | 17,094 | 97.8% |
| **60세 이상** | 14,038 | 80.3% | 10,190 | 58.3% | 12,099 | 69.2%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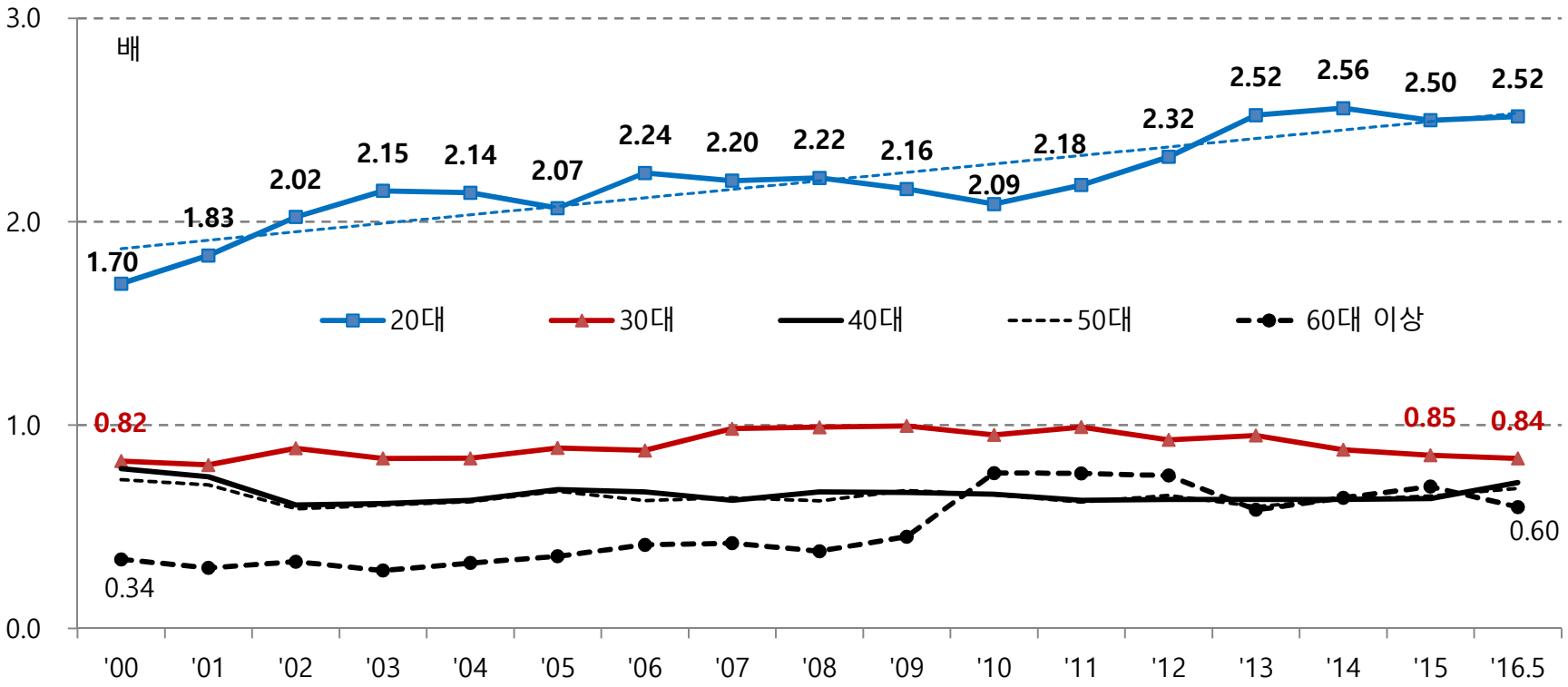
-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통계 발표, 정규직의 시간당 평균 임금은 17,480원임
- 이는 비정규직 근로자 어떤 연령대에서도 받지 못하는 임금 수준임
- 동일한 능력을 가정하고 산출된 임금임에도 불구하고 고용형태로 인한 차별이 극심함을 재확인시켜주고 있음

# 성별 시간당 임금 ('15)

| | 정규직 | | 비정규직 | | 전체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임금(원) | 상대 임금 | 임금(원) | 상대 임금 | 임금(원) | 상대 임금 |
| **평 균** | **17,480** | **100.0%** | 11,452 | 65.5% | 15,978 | 91.4% |
| **남 성** | 20,008 | 114.5% | 13,387 | 76.6% | 18,681 | 106.9% |
| **여 성** | 12,995 | 74.3% | 9,645 | 55.2% | 11,915 | 68.2%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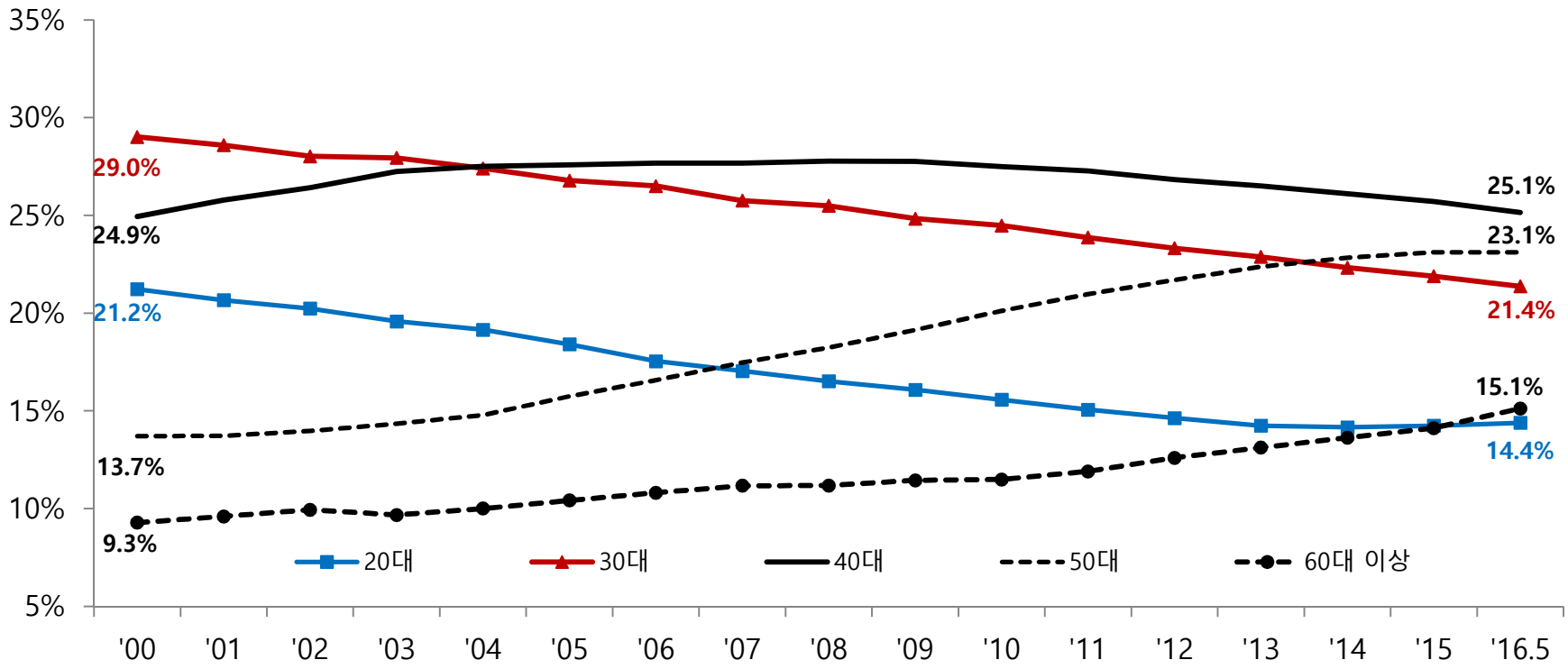
-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임금 수준은 정규직 남성근로자에 비해 48.2% 수준, 비정규직 남성근로자에 비해 72.0% 수준, 정규직 여성근로자에 비해서는 74.2%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음
-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는 정규직 남성근로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고 있어 근로형태 뿐 아니라 성차별도 매우 심한 임금 구조를 보이고 있음

# 연령대별 경활인구 비중 대비 실업자 비중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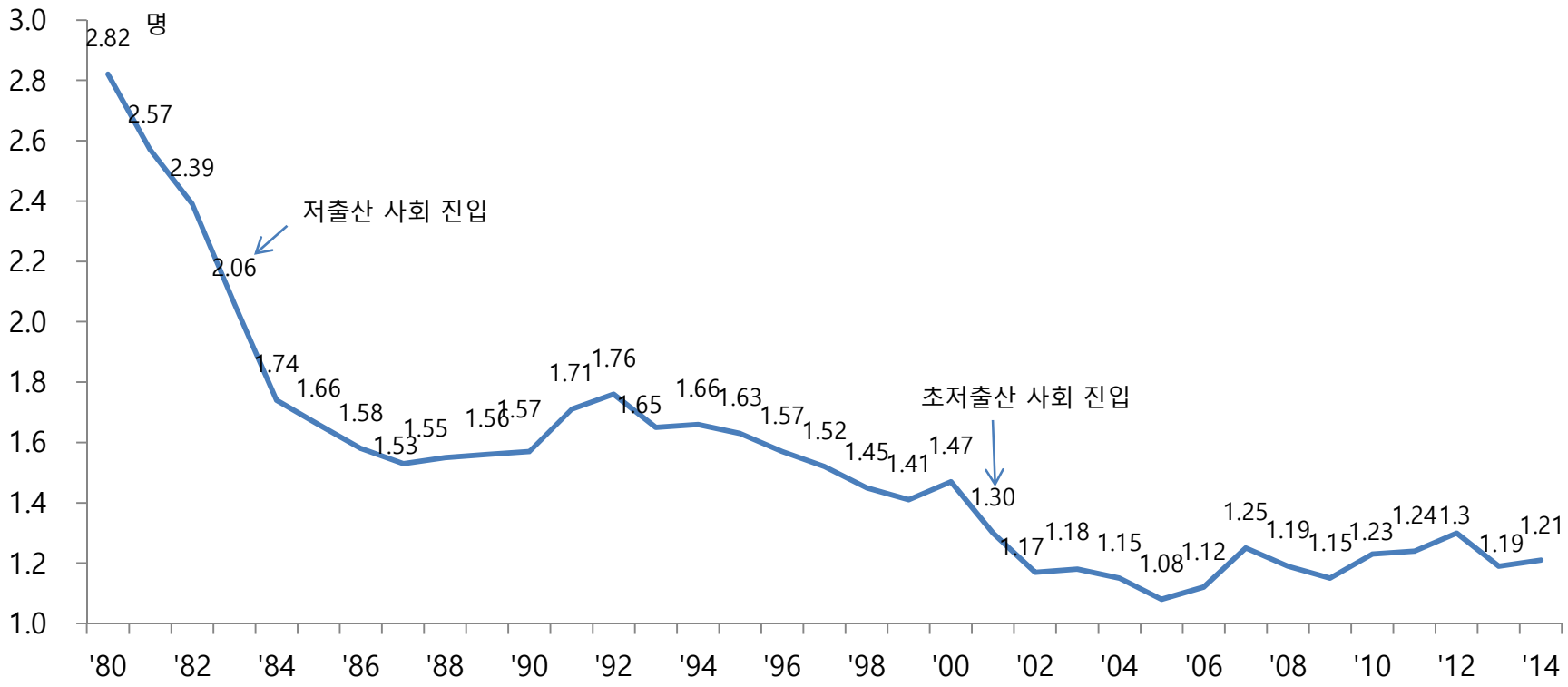

- 20대는 '00년 1.7배이던 것이 '16년에는 2.5배로 급증한 것을 알 수 있음
- 이는 20대의 경제활동인구 비중은 '00년 22%에서 '16년5월 15.3%로 감소하는 동안, 20대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'00년 37.2%에서 '16년5월 40.4%로 오히려 증가했기 때문임
- 다른 연령대는 1미만에서 안정적인 양상을 보임
- 이는 '고용 없는 성장'에서 '고용 없음'을 청년들이 고스란히 감내하는 양상임

# 전체 취업자 대비 연령대별 취업자




- 20대 취업자의 수가 60대 이상 취업자 수에 추월당하였고, 30대 역시 50대에게 추월당한 상태임
- 그 추세가 일관되고 속도도 매우 급격하게 증감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
- 40대 취업자가 30대 취업자 비중을 추월하여 현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완만한 증가 후 감소세를 보임. 그러나 현 추세 상으로 보면, 40대 취업자의 비중은 다시 50대에게 수년 내에 역전될 것으로 보임

# 합계출산율




- 노동인력의 고령화는 향후 우리경제의 활력을 잃게 할 것이라는 우려가 단순한 우려가 아닌 이미 지금의 현실이고 향후 더 심화될 것임
- 출산율 제고를 위한 대책 중 가장 시급한 것은 청년들이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임

# 요약 (노동시장)

- 근로자에 대한 소득분배 악화가 가계 소득 및 소비 둔화의 원인으로 판단됨
- 특히, 비정규직에 대한 소득분배는 더욱 비참한 상황으로 정규직 임금의 65.5% 수준임
- 이에 따라, 비정규직 확대 및 보편화는 직업 안정성뿐 아니라 차별적 저임금으로 인해 한국경제의 경제적·사회적 발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
- 한국경제는 노동인력의 고령화 심화와 함께 청년층 실업이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한국경제의 미래가 더욱 암울한 상황임
- 청년층의 노동력 상실을 막아 미래의 성장을 기약하고 고령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청년 일자리 안정 정책이 현 정책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할 것임

# V 적자재정: 속도와 구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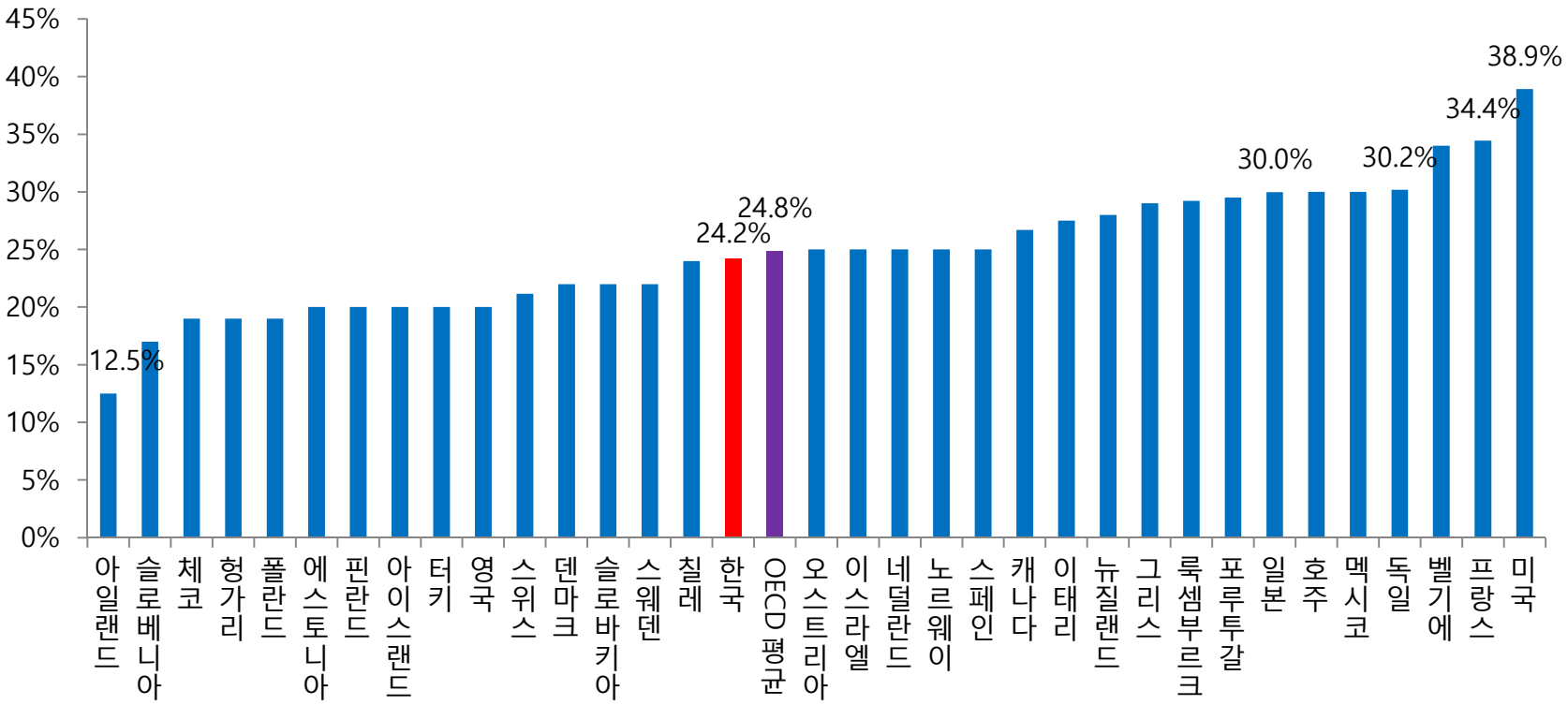
-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
- OECD 법인세 최고세율
- 사용자부담 사회보장기여금 GDP 비중
- 정부별 조세탄성치

#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

| | 재정수지(조원) | | 국가채무 | |
|---|---|---|---|---|
| | 통합수지 | 관리수지 | 금액(조원) | GDP대비 |
| **2002** | 22.7 | | 133.8 | 17.6% |
| **2003** | 7.6 | | 165.8 | 20.4% |
| **2004** | 5.6 | | 203.7 | 23.3% |
| **2005** | 4.9 | | 247.9 | 27.0% |
| **2006** | 6.0 | | 282.7 | 29.3% |
| **2007** | 37.0 | | 299.2 | 28.7% |
| **2008** | 15.8 | | 309.0 | 28.0% |
| **2009** | -17.6 | | 359.6 | 31.2% |
| **2010** | 16.7 | -13.0 | 392.2 | 31.0% |
| **2011** | 18.6 | -13.5 | 420.5 | 31.6% |
| **2012** | 18.5 | -17.4 | 443.1 | 32.2% |
| **2013** | 14.2 | -21.1 | 489.8 | 34.3% |
| **2014** | 8.5 | -29.5 | 533.2 | 35.9% |
| **2015** | -0.2 | -38.0 | 590.5 | 37.9%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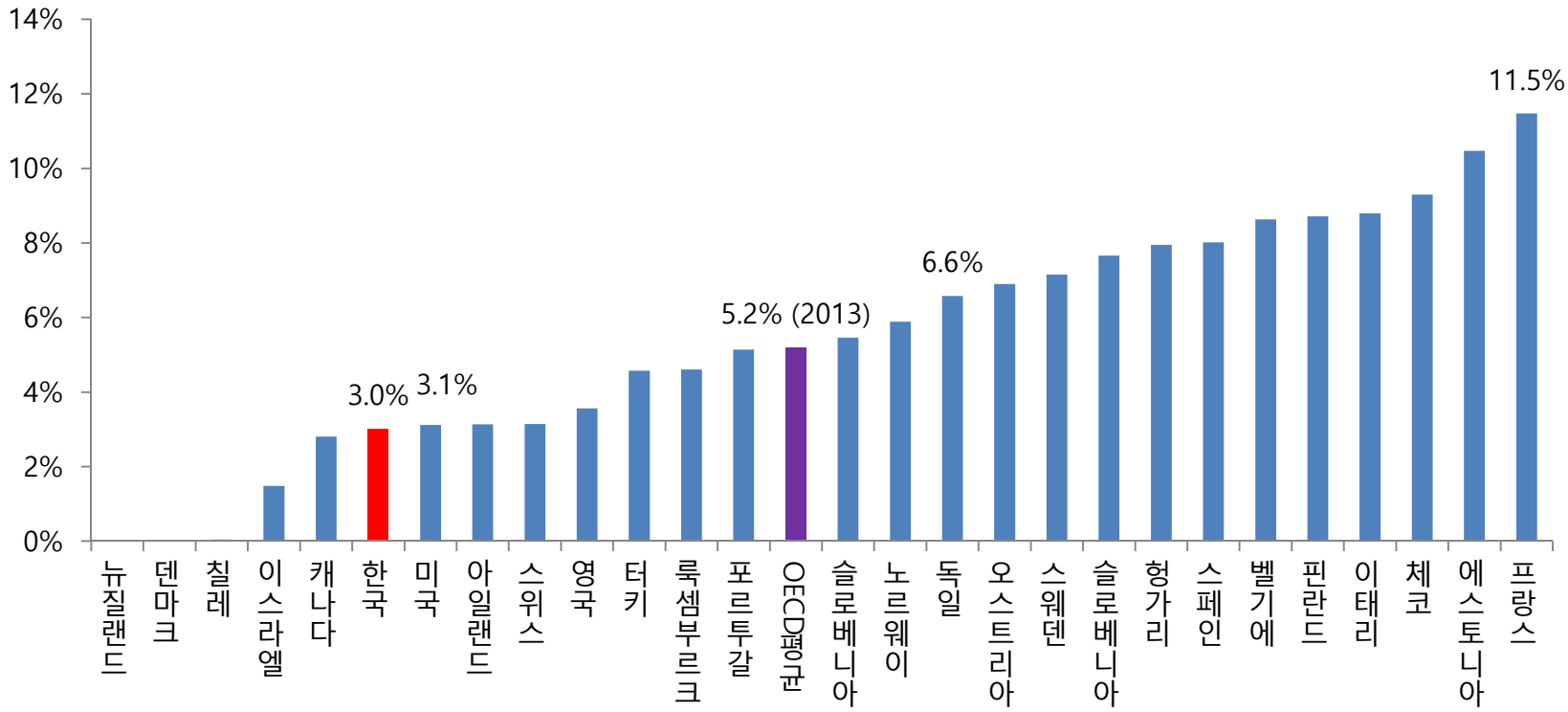
-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한 관리재정수지의 적자폭이 지속적으로 증가
- 지속적 적자재정은 복지수요 및 구조조정에 대응할 여력을 줄임
- 국가채무 또한 2015년 GDP 대비 38%에 육박함
- 국가채무의 GDP 대비 규모보다는 그 증가속도가 매우 급속함이 더욱 우려됨

# OECD 법인세 최고세율 (surtax 포함, ’16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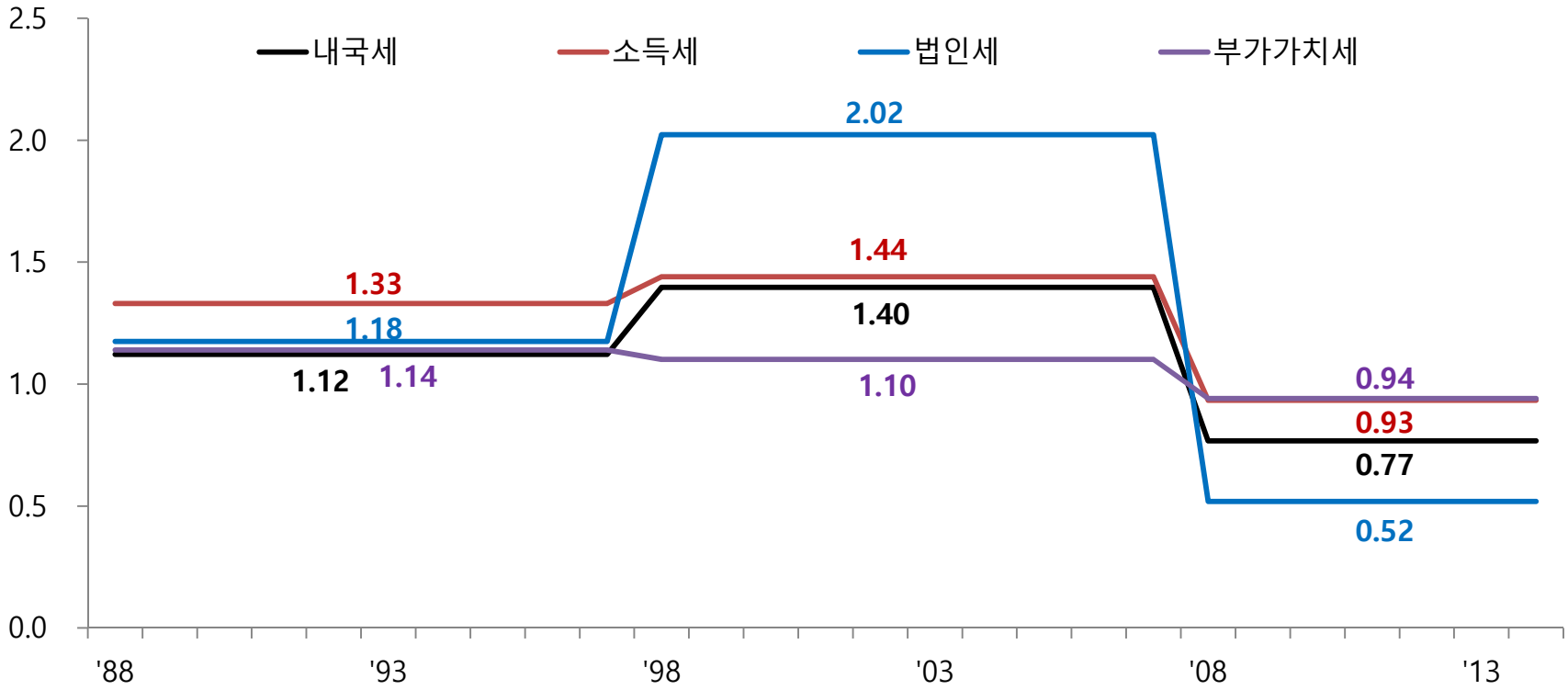

- OECD 회원국 중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 수준은 OECD 평균 수준임

# 사용자부담 사회보장기여금 GDP 비중 ('14)




- 고용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장기여금은 OECD 회원국 중 하위수준임

# 정부별 조세탄성치




- 조세탄성치는 '세수 증가율/명목GDP 성장률'로 경제성장률이 1%p 변할 때 세수가 몇 %p 변하는지를 나타냄. 따라서 조세탄성치는 주로 물가 등 경기변동 요인과 함께 세목별 세제의 변화에 의해 결정됨
- 이명박 정부 이후 조세탄성치는 급격하게 하락함. 특히, 법인세탄성치 하락이 급격함
- 이는 감세 정책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구조적으로 세수 부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

# 요약 (적자재정)

- 현재의 상황으로는 재정수지 또한 균형재정수지 달성은 요원한 것으로 보임
- 국가채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 590조원으로 GDP의 38%에 달함
- 정부는 절대적 수준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라고 하나, 국가채무의 증가속도는 절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
- 특히, 정부의 낙관적 경제전망을 바탕으로 편성된 예산과 함께, 지속적 세수 부족은 균형재정이나 사회안전망을 위한 지출은 차치하고 불용액의 증가나 추경 편성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음

# VI 지역경제, 기업: 불균등의 이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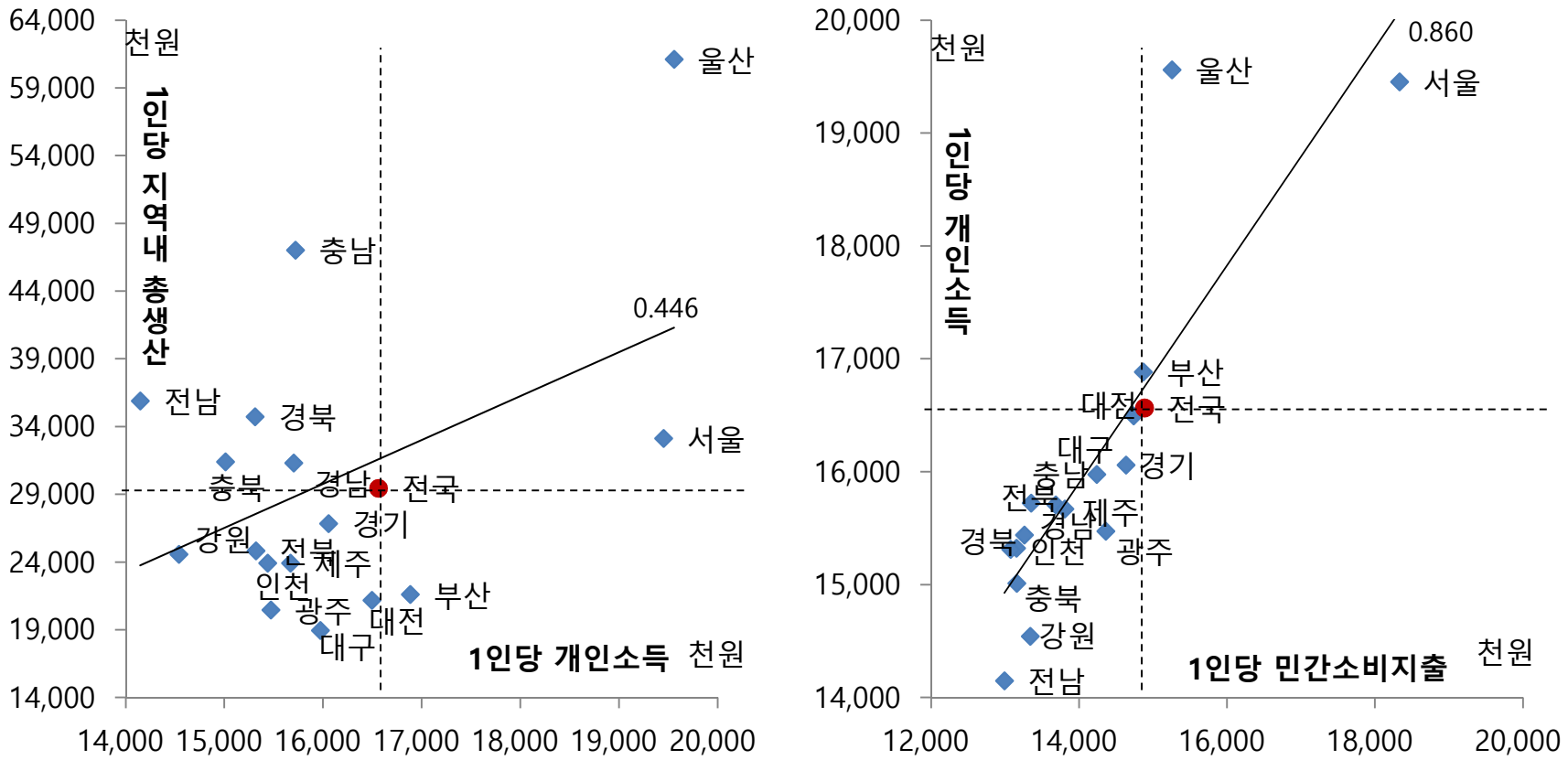
- 지역별 GRDP, 개인소득, 소비지출
- 1인당 GRDP, 개인소득, 소비지출 관계
- 1인당 GRDP, 소비지출 관계
- 대·중소기업의 안정성과 수익성
- 대·중소기업의 생산 효율성

# GRDP, 개인소득, 소비지출 (명목, '14)

| 지 역 | 지역내총생산(GRDP) | | | 개인소득(총처분가능소득) | | | 민간소비지출 |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금액(천원) | 순위 | 성장률 | 금액(천원) | 순위 | 성장률 | 금액(천원) | 순위 | 성장률 |
| 서 울 | 33,122.4 | 5 | 3.2% | 19,452.7 | 2 | 4.1% | 18,331.4 | 1 | 2.0% |
| 부 산 | 21,613.5 | 13 | 5.3% | 16,883.9 | 3 | 4.8% | 14,870.3 | 3 | 2.8% |
| 대 구 | 18,940.7 | 16 | 4.3% | 15,974.8 | 6 | 5.7% | 14,239.8 | 7 | 3.2% |
| 인 천 | 23,920.7 | 11 | 4.6% | 15,438.9 | 11 | 4.8% | 13,262.1 | 12 | 2.1% |
| 광 주 | 20,447.6 | 15 | 4.0% | 15,472.4 | 10 | 4.9% | 14,362.5 | 6 | 2.4% |
| 대 전 | 21,169.9 | 14 | 3.7% | 16,495.4 | 4 | 4.6% | 14,740.5 | 4 | 2.8% |
| 울 산 | 61,102.5 | 1 | 0.9% | 19,559.0 | 1 | 2.1% | 15,256.7 | 2 | 2.5% |
| 경 기 | 26,826.6 | 8 | 3.8% | 16,058.3 | 5 | 4.5% | 14,637.0 | 5 | 2.2% |
| 강 원 | 24,573.7 | 10 | 4.2% | 14,540.5 | 15 | 6.5% | 13,342.8 | 11 | 3.1% |
| 충 북 | 31,389.0 | 6 | 3.2% | 15,011.2 | 14 | 3.0% | 13,159.2 | 13 | 3.0% |
| 충 남 | 47,024.3 | 2 | 3.1% | 15,722.6 | 7 | 3.9% | 13,352.4 | 10 | 3.1% |
| 전 북 | 24,831.7 | 9 | 5.0% | 15,322.1 | 12 | 4.7% | 13,156.5 | 14 | 3.8% |
| 전 남 | 35,883.1 | 3 | 1.5% | 14,147.8 | 16 | 3.6% | 12,992.2 | 16 | 3.2% |
| 경 북 | 34,711.3 | 4 | 2.8% | 15,312.4 | 13 | 5.3% | 13,078.0 | 15 | 3.1% |
| 경 남 | 31,311.2 | 7 | 2.3% | 15,704.9 | 8 | 4.8% | 13,684.4 | 9 | 2.5% |
| 제 주 | 23,911.3 | 12 | 3.2% | 15,670.6 | 9 | 1.5% | 13,809.1 | 8 | 2.3% |
| 전 국 | 29,441.2 | | 3.4% | 16,563.9 | | 4.4% | 14,885.3 | | 2.4%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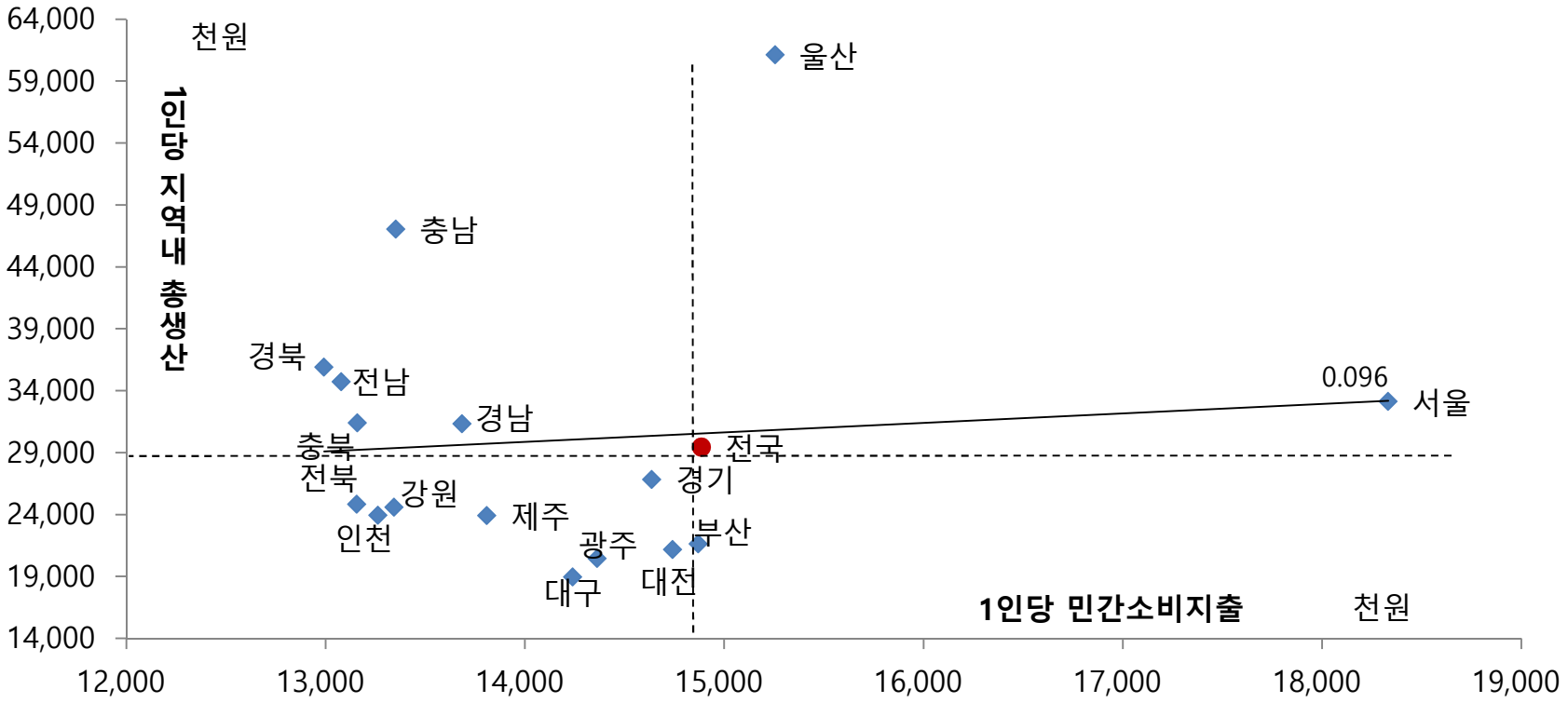
- 1인당 생산, 소득, 소비 수준이 지역별로 비교적 큰 차이가 있음
- 1인당 생산이 높다고 그에 완전 정비례해서 소득 및 소비 수준이 높은 것이 아님

# GRDP, 개인소득, 소비지출 관계 (명목, ’14)




- 개인소득과 소비 간에는 비교적 큰 陽의 상관관계(상관계수: 0.860)를 가지나 지역내총생산과 개인소득 간에는 陽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기는 하지만 크기가 현저히 줄어듦 (상관계수: 0.446)

# GRDP, 소비지출 관계 (명목, ’14)




- 이러한 차이를 발생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은 지역별 산업구조에 의한 것으로 보임
- 2차산업이 총생산에는 크게 기여하지만 부가가치의 상당부분이 기업소득 등으로 귀속되는 특성을 보이는 반면 3차산업은 부가가치가 상대적으로 가계의 소득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판단됨
- 지역내총생산은 기업소득 등을 포함한 것으로, 특정 지역이 높은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가계소득 및 소비 수준도 지역의 생산 수준만큼 높지만은 않다는 것을 인지하여야 할 것임 (지역내총생산과 민간소비지출 간에는 상관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)

# 대·중소기업의 안정성과 수익성

| | 전산업 | | | | | | 제조업 | | | |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부채비율, % | | 유동비율, % | | 차입금의존도, % | | 부채비율, % | | 유동비율, % | | 차입금의존도, % | |
| | 대 | 중소 | 대 | 중소 | 대 | 중소 | 대 | 중소 | 대 | 중소 | 대 | 중소 |
| **2009** | 149.4 | 188.4 | 123.2 | 116.8 | 31.9 | 35.1 | 100.8 | 168.7 | 116.8 | 113.5 | 20.4 | 36.3 |
| **2010** | 140.5 | 182.2 | 122.1 | 117.6 | 31.4 | 34.3 | 91.3 | 170.2 | 117.6 | 114.1 | 20.2 | 35.9 |
| **2011** | 144.9 | 179.2 | 122.4 | 118.4 | 31.7 | 33.8 | 92.6 | 171.0 | 118.4 | 113.3 | 21.5 | 35.8 |
| **2012** | 140.1 | 174.3 | 122.8 | 127.7 | 31.3 | 33.8 | 85.5 | 165.6 | 127.7 | 117.3 | 21.9 | 36.5 |
| **2013** | 133.5 | 168.3 | 125.7 | 136.8 | 30.9 | 33.5 | 77.5 | 159.1 | 136.8 | 121.8 | 20.3 | 36.6 |
| **2014** | 127.0 | 161.5 | 128.2 | 137.2 | 30.8 | 36.7 | 73.4 | 155.4 | 137.2 | 123.1 | 20.5 | 39.0 |
| | **매출총이익률, %** | | **영업이익률, %** | | **순이익률, %** | | **매출총이익률, %** | | **영업이익률, %** | | **순이익률, %** | |
| | 대 | 중소 | 대 | 중소 | 대 | 중소 | 대 | 중소 | 대 | 중소 | 대 | 중소 |
| **2009** | 21.2 | 19.6 | 5.44 | 3.25 | 3.80 | 1.55 | 17.0 | 17.5 | 6.43 | 4.49 | 5.77 | 2.07 |
| **2010** | 21.0 | 19.5 | 6.48 | 3.29 | 5.00 | 1.77 | 18.2 | 17.1 | 7.67 | 4.53 | 7.12 | 2.42 |
| **2011** | 18.8 | 19.6 | 5.28 | 3.09 | 3.30 | 1.56 | 15.7 | 16.6 | 6.13 | 4.21 | 4.74 | 2.22 |
| **2012** | 18.0 | 20.4 | 4.66 | 3.05 | 2.88 | 1.80 | 15.4 | 17.2 | 5.43 | 4.31 | 4.71 | 2.62 |
| **2013** | 18.3 | 21.1 | 4.66 | 3.16 | 1.95 | 1.99 | 16.0 | 17.6 | 5.57 | 4.40 | 3.69 | 2.82 |
| **2014** | 18.7 | 21.7 | 4.42 | 3.12 | 2.68 | 2.05 | 15.3 | 17.7 | 4.25 | 4.12 | 3.57 | 2.60 |

- 자본대비 부채를 나타내는 부채비율이나 유동부채대비 유동자산을 나타내는 유동비율은 안정적으로 개선되는 양상임. 그러나 여전히 중소기업이 높아 금융비용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남
- 수익성이 중소기업이 안정적인 반면 대기업들이 오히려 축소되는 양상임. 그러나 중소기업은 총이익률→영업이익률→순이익률로 갈수록 대기업과 비교해 차이가 커짐

# 대·중소기업의 생산 효율성

| | 전산업 | | | | | | 제조업 | | | |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인건비율, % | | 연구개발비율, % | | 차입금이자율, % | | 인건비율, % | | 연구개발비율, % | | 차입금이자율, % | |
| | 대 | 중소 | 대 | 중소 | 대 | 중소 | 대 | 중소 | 대 | 중소 | 대 | 중소 |
| **2009** | 8.7 | 14.1 | 1.16 | 0.62 | 4.58 | 6.05 | 7.0 | 12.9 | 1.82 | 1.06 | 5.69 | 6.08 |
| **2010** | 8.1 | 13.8 | 1.19 | 0.64 | 4.57 | 5.95 | 6.8 | 12.6 | 1.84 | 1.07 | 5.17 | 5.96 |
| **2011** | 7.6 | 13.9 | 1.13 | 0.64 | 4.35 | 6.02 | 6.3 | 12.8 | 1.74 | 1.09 | 4.86 | 6.07 |
| **2012** | 7.8 | 14.7 | 1.21 | 0.65 | 4.36 | 5.66 | 6.5 | 13.8 | 1.93 | 1.13 | 4.56 | 5.71 |
| **2013** | 8.1 | 15.4 | 1.44 | 0.66 | 3.95 | 5.08 | 7.0 | 14.5 | 2.37 | 1.17 | 4.10 | 4.93 |
| **2014** | 8.7 | 16.0 | 1.35 | 0.75 | 3.74 | 4.41 | 7.8 | 15.2 | 2.25 | 1.27 | 3.97 | 4.41 |
| | **노동소득분배율, %** | | **설비투자효율, %** | | **기계투자효율, %** | | **노동소득분배율, %** | | **설비투자효율, %** | | **기계투자효율, %** | |
| | 대 | 중소 | 대 | 중소 | 대 | 중소 | 대 | 중소 | 대 | 중소 | 대 | 중소 |
| **2009** | 60.6 | 79.4 | 43.1 | 86.2 | 189.0 | 600.6 | 51.8 | 72.1 | 55.2 | 62.3 | 153.9 | 312.4 |
| **2010** | 54.7 | 79.1 | 48.1 | 91.3 | 212.5 | 637.5 | 46.5 | 71.8 | 63.5 | 68.0 | 172.6 | 340.2 |
| **2011** | 58.1 | 80.3 | 46.0 | 90.8 | 180.8 | 630.9 | 50.5 | 73.7 | 57.0 | 67.6 | 145.6 | 334.2 |
| **2012** | 61.0 | 81.5 | 44.4 | 93.5 | 166.0 | 667.2 | 53.5 | 74.7 | 54.2 | 69.6 | 133.0 | 351.0 |
| **2013** | 62.4 | 81.8 | 43.2 | 93.4 | 164.0 | 688.9 | 55.1 | 75.2 | 54.2 | 69.1 | 133.2 | 357.7 |
| **2014** | 65.5 | 82.5 | 42.6 | 92.0 | 163.7 | 696.3 | 63.9 | 77.2 | 50.0 | 66.7 | 127.1 | 357.8 |

- 중소기업의 경영단계별 이익 축소 폭이 대기업에 비해 큰 요인은 중소기업이 노동집약적 생산과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임금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매출액대비 인건비 지출이 큰 것으로 나타남. 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설비 및 기계 투자효율의 현격한 차이를 통해서도 확인됨
- 대·중소기업 모두 매출액대비 연구개발의 비중이 낮은 양상이고 중소기업은 특히 대기업의 절반수준에 불과함

# 요약 (지역경제, 기업)

- 지역별 총생산의 차이가 반드시 지역별 가계 소득 및 소비와 완전 비례적인 것은 아니므로, 지역내총생산만으로 지역경제를 판단하는 것은 여러 정책적 오판을 유발할 수 있음
- 중소기업의 수익성, 성장성 개선을 위해서는 연구개발 및 기계·설비 투자 확대를 통한 생산성 증대가 요구됨. 이를 위해 기존의 세제지원(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나 가속상각제도 등)과 같은 손쉬운 금전적 지원 정책 외에 연구기관과의 공동 R&D·공정개선·신기술교육·설비개선 기금 마련 등 실효성 있는 정책 방안이 요구됨

# 자료 출처

3p. 한국은행, 2016년 경제전망, 2016.1.13.
한국은행, 2016년 경제전망(수정), 2016.4.19.
한국은행, 2016년 ¼분기 국민소득(잠정), 2016.6.2.
4p. KDI, KDI경제전망, 2016.5.
국회예산정책처, 2016년 수정 경제전망, 2016.5.30.
OECD, Economic Outlook No.99, 2016.6.1.
IMF, World Economic Outlook, 2016.4.
LG경제연구원, 2016년 경제전망, 2016.4.1.4.
현대경제연구원, 2016년 한국경제 수정 전망, 2016.4.15.
5~8pp. 한국은행, 경제통계시스템
9p.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
11~16pp. 한국은행, 경제통계시스템
19~21pp. 한국은행, 경제통계시스템
22~23pp. 국민은행, KB주택통계
26p. 한국은행, 경제통계시스템
통계청, 국가통계포털
고용노동부, 고용노동통계
27p. 고용노동부, 고용노동통계
28~30pp. 고용노동부, 2015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분석, 2016.4.
31~33pp. 통계청, 국가통계포털
34p. 통계청, 국가통계포털
기획재정부, 재정통계
37~38pp. OECD, OECD dataset
39p. 통계청, 국가통계포털
42~44pp. 통계청, 2014년 지역소득(잠정), 2015.12.23.
45~46pp. 한국은행, 경제통계시스템

*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의견이며, 민주정책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